



역사왜곡을 통한
대한민국 허물기 공작,
좌편향화 된 한국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역사왜곡을 통한
대한민국 허물기 공작,
좌편향화 된 한국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역사왜곡을 통한
대한민국 허물기 공작,
좌편향화 된 한국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좌편향화 된 한국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980년 이후 한국사학계를 장악한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국현대사에 대한 왜곡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뿐 만 아니라 이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이의 심각성과 폐해를 정부당국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와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첫째는 2011년 2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출제문제의 편향성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국회정책토론회가 그것입니다.

당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문제중 한국사 특히 현대사 부분의 출제문제가 민중사관(民衆史觀)과 친북사관(親北史觀)으로 좌편향되어 있어, 그 누구보다도 확고한 국가관을 가져야 할 국가공무원 지망생들에게 결

국 시험준비 단계부터 ‘친북좌편향 된 한국사’로 공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개탄한바 있습니다.

한 토론자는 이럴바에 아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국사시험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임용시험 출제를 관장하는 정부부처(행정안전부)가 이의 실상을 알고나 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5월 2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이란 주제로 개최한 학술토론회입니다.

당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친북좌편향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우파정부라는 현 정부 하에서 올해 검정된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지난 좌파정부 시절 관철된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현상’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자리잡은 친북좌파세력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재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해야 할 정부당국(교육과학기술부)은 묵묵부답이며, 국정운영에 책임을 져야하는 대통령도, 집권여당도, 잘못된 국가시책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아예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한국사의 친북좌편향 왜곡은 친북좌파세력들의 이른바 ‘역사왜곡을 통한 대한민국 허물기 작업’의 일환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지적해주어도 관심도 가지지 않으며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제 나라 역사가 일부 세력들에 의해 친북좌편향으로 왜곡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 하는 일이 ‘대한민국 허물기작업’의 조장과 방치입니까? 도대체 지구상 어느 나라가 이런 일에 세금을 쏟아부어 넣고 있는지… 우리나라 말고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가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두 차례에 걸친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 녹취록을 재편집하여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학회의 고문님, 위원님,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주)엘트웰 김박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 8. 15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고 영 주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유 동 열

차례

책을 펴내며/ 고영주 · 유동열	4
제1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9
발제문 : 고교 한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양동안	11
토론문 :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이념성향 분석/ 김필재	37
토론 : 이주영, 양동안, 이주천, 제성호, 조영기, 김필재	59
제2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의 편향성과 개선방안	85
발제문 : 공무원임용시험 한국사과목 현대사문제의 사상적 편향성 분석/ 양동안	87
발제문 : 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의 분석 및 개선방향/ 모준영	123
토론 : 이주영, 제성호, 배진영	159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소개	171
자유민주연구학회 소개	174

제1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❶ 발제문 : 고교 한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양동안

❷ 토론문 :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이념성향 분석/ 김필재

❸ 토론 : 이주영, 양동안, 이주천, 제성호, 조영기, 김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학술토론회 발제문(2011.5.20.)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1. 머리말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사 교육은 두 부류의 교과서로 실시되고 있다. 하나는 7년전부터 2~3학년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온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이다. 다른 하나는 금년부터 1~3학년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 과목의 교과서 《한국사》이다.

고등학교의 한국사 관련 교과서가 이처럼 2중으로 등장하게 된 기현상은 교육부가 2009년 12월에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종전 고등학교 1학년 필수 과목이던 역사(국사 + 세계사) 과목이 필수과목에서 배제되고, 역사 과목의 국사 부분을 2~3학년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에 통합하여 한국사 과목으로 만들고, 그 한국사 과목을 고등학교 1~3학년의 선택과목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금년과 내년까지는 2~3

학년 학생들 가운데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고등학교 한국사 관련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사》의 두 부류가 병존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관련 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이 글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6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한국사》의 내용의 약 60% 정도가 《한국 근·현대사》이고, 《한국사》 내용의 문제점은 거의 모두 한국 근·현대사 관련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놓고 심각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주로 금성출판사가 출판한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 논쟁에서 애국진영의 지식인들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교육부가 권한을 행사하여 그 책의 오류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집필자들은 중요한 대목들의 수정을 거부했다. 따라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본질적인 오류들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금성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출판사들이 발행한 5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금성출판사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대부분 내포하고 있다. 그들 5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애국진영으로부터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사나 집필자들이 자기들의 책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결국,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내포된 그러한 문제점들은 《한국사》의 근·현대사 부분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들의 근·현대사 부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 그것이 곧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의 문제점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의 교과서로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데 반해, 《한국사》 교과서들의 교과서로서의 수명이 많이 남았고 그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의 교과서로서의 수명은 2012년까지이다. 고 1학년 때 필수과목으로 역사를 수강한 학생들이 2012년이면 고교과정을 모두 마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한국사》 교과서들은 앞으로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교과서로서의 수명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최근 교육부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과목을 2012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사》 교과서들의 중요성은 크게 높아졌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워야 하며, 그러자면 반드시 《한국사》 교과서들을 통해서 한국사를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사》 교과서들의 내용은 앞으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강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명이 오래 지속되고 중요성이 높은 《한국사》 교과서들의 내용만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게 된다.

금년에 발행된 《한국사》교과서들은 미래엔컬처그룹, 천재교육, 비상교육, 법문사, 삼화출판사, 지학사 등 6개 출판사에서 발행된 6종이다. 6종의 교과서들 가운데 미래엔컬처 그룹, 천재교육, 비상교육 등 3개 출판사가 발행한 《한국사》교과서들은 보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미래엔컬처그룹, 천재교육은 자기들이 발행했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한국사》교과서들에 그대로 계승시키고 있다. 삼화출판사와 지학사가 발행한 《한국사》교과서들은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지학사 발행 《한국사》교과서는 여타 5종에 비해 내포된 문제점들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

전술한 바와 같이 6개 출판사들의 6종의 《한국사》교과서들에 내포된 문제점들은 근·현대사 관련 서술들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시기에 관한 서술들에 내포된 문제점들은 근·현대사 관련 서술에 내포된 문제점들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글에서는 근·현대사 관련 서술에 내포된 문제점들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문제점들은 관점의 부당성과 서술내용의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2. 《한국사》 교과서들의 문제점들

가. 관점의 부당성

관점의 문제는 서술 대상으로 무엇을 선정하고, 선정된 서술 대상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근·현대 시기에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무엇을 서술하고 무엇을 서술하지 않을 것이며, 서술하기로 선정된 사건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관점은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비추어 정립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나아가서는 모든 등급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교육시키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현재의 국사상황 및 민족상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래된 것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 한국사를 교육하는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과서를 서술하려면, 서술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과 인물들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을 방해한 사건과 인물들의 활동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이 어떤 인물들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물들의 어떤 방해활동을 극복하고 실현

되어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술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과 인물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하되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에 기여한 사건과 인물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을 방해한 사건과 인물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를 배우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애국심이 함양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사》교과서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다 이러한 관점에 반대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교육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꼭 서술해야 할 사항들을 서술하지 않고 서술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서술한다거나, 서술 대상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켜야 할 사항을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켜야 할 사항을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그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술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서술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례

■ 6종의 《한국사》교과서들은 예외 없이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지도자인 이승만이 참여하거나 주도한 애국-민권-독립운동을 서술하지 않거나 서술할 경우에는 이승만이 참여·주도한 사실을 서술하지 않았다.

- 대한제국 말기의 선각적 애국-민권-계몽운동인 독립협회→만민공동회 운동을 서술함에 있어서 이승만이 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다는 사실을 서술하지 않고 있다.
- 3·1운동 직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주 지역 동포들의 독립촉구 대회와 행진을 소개하면서 그 주도자 2인 중의 한 사람이 이승만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서재필만 언급하거나 둘 다 언급하지 않았다.
- 1920~30년대의 해외 각지의 다양한 세력의 독립운동을 소개하면서도 그 시기 이승만의 독립운동 관련 활동은 소개하지 않았다.
- 2차 대전 발발 후 미주 동포들의 독립운동을 서술하면서 이승만의 활동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교과서는 이승만에 반대하는 단체의 활동만 언급했다.
- 이승만이 1945년 10월 귀국 직후 전개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활동은 언급하지 않거나 극히 소략하게 언급했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남한 거주 좌·우·중도 세력이 모두 참여한 최초이자 마지막의 민족통일전선 기구였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모태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거나 소략하게 언급했다. 좌익 중심 조직이

며 대한민국 건국 방해세력의 연합체인 여운형-박헌영의 조선건국 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을 긍정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한 것과 대조된다.

■ 6종의 교과서들은 예외 없이 한반도의 비공산 통일국가 건국 및 대한민국 건국-유지-발전을 방해한 세력들의 방해책동에 대한 서술을 하지 않았다.

- 1920년대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세계 공산화를 목표로 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아 소련의 그런 노선에 대한 오해 유발했다.

- 1923년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대회를 서술하면서 그것이 소련공산당이 제공한 공작금을 사용하여 개최되었고, 공산당의 임시정부와해공작 음모와 연관된 것이었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 신간회 관련 서술에서 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지침에 따라 신간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신간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자 그것을 와해시켰다는 점을 서술하지 않았다.

- 일제 하 노동자 농민 운동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연결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 미·소군의 한반도 분할점령을 서술하면서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자마자 일방적으로 38선을 봉쇄하여 한반도를 분단의 길로 몰아넣은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때 북조선 공산당이 정립한 ‘북조선 민주기지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조선 민주기지론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기초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 1946년 11월 북한에서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47년 2월 그 위원들이 평양에 모여서 북조선 인민회의를 구성했으며, 북조선인민회의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선출했다는 사실과, 인민회의가 민주국가의 국회에 상당하며, 인민위원회가 행정부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1947년 12월 북조선인민회의가 한반도 통일정부에 적용할 인민민주주의 헌법 초안을 이미 만들었으며,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협상회의가 종료된 직후 북조선인민회의가 이 헌법초안을 정식 헌법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에 대해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북한정권의 동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평양에서의 남북협상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들의 내용이 사실상 공산화통일을 지지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았다.

- 6·25전쟁 휴전 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과 혁명공작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극히 소략하게 서술했다.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최대 문제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그것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 1980년대 중반의 민주화운동을 서술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혁명적 학생운동세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1980년대 노동운동을 서술하면서 그것을 주도한 혁명적 노동운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이후의 시민운동이 혁명세력의 유연한 투쟁전술과 관련된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 이후 사상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었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 서술하지 말거나 과대 서술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대 서술한 사례

○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서술할 필요가 없거나 적어도 과대하게 서술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 건국-유지-발전 방해세력들에 대해 과대하게 긍정 서술했다.

-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원봉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과대하게 서술했다. 이승만의 활동을 서술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지학사 교과서 제외]

- 항일무장투쟁을 서술하면서 김일성이 관련된 조직의 활동을 북한 측 주장대로 과대 서술했다.[지학사 교과서 제외]
-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은, 또 정황상(일제 패망 직전의 여운형과 조선총독부 간의 우호적 관계) 가능성이 희박한 여운형의 건국동맹에 대해 과대 서술했다.

나. 서술의 오류(사실 왜곡)

○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서술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 해방 직후 정국을 서술하면서 여운형 박헌영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을 좌·우·중도의 모든 세력이 참여한 조직으로 서술했다. [지학사 발행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
- 미국은 38도선 이남에 영향력이 컸던 사회주의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군정을 선포하고 직접 통치 방식을 취했고, 그에 따라 미군정은 사회주의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조선 인민공화국을 부정했으며, 심지어는 대한민국 인시정부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사회주의세력의 활동이 활발하여 미국과 달리 소련은 통치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었고, 그에 따라 소련은 조력자의

역할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주의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비상교육 311쪽] ※미국이 남한에서 직접 군정을 실시한 것은 한국인의 자치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이지 사회주의세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다. 해방직후 북한에서는 좌익세력보다 우익세력보다 강했고, 소련군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직접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면에서는 철저하게 북한 집권자들을 지휘 조종했다.

- 반탁입장을 취하다가 찬탁으로 돌변한 좌익의 입장을 서술하면서 그러한 입장돌변이 소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그에 관한 공산당의 변명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서술했다.[모든 교과서]
- 미·소공동위원회에 관해 서술하면서 그것이 소련의 불합리한 주장 때문에 결렬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미·소가 다 같이 잘못된 것처럼 왜곡 서술했다.[미래엔컬처 326쪽; 천재교육 312~3쪽; 법문사 309쪽]
- 좌우합작운동을 여운형과 김규식이 자주적으로 전개하고, 이승만은 좌우합작을 반대한 것처럼 왜곡 서술했다.[미래엔컬처 330쪽] ※실제로는 이승만은 좌우합작을 격려했다. 뒤에 가서 이승만이 좌우합작운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좌우합작운동이 순수한 좌우합

작은동의 궤도를 벗어나 한편에서는 공산당에 이용당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군정이 이승만과 김구를 정치적으로 거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였다.

- 미군정의 쌀 강제매수제 실시 때문에 9월총파업과 10월 대구 폭동(‘봉기’로 표현)이 일어난 것처럼 왜곡 서술했다.[천재교육 314쪽]
※두 폭동은 공산당의 폭력투쟁전술(신전술)로의 전환 및 북한 점령 소련군의 지침에 따른 공산당 주도의 폭동이었다.
- 제주도 4·3폭동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반대투쟁에서 발단한 것인데, 3·1절 기념시위에 대한 경찰의 발포에서 발단된 것처럼 왜곡 서술했다.[미래엔컬처 336쪽]
- 1950년의 농지개혁에 대해 정부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시행을 늦춘 것처럼 왜곡 서술했다.[미래엔컬처 340쪽] ※정부는 농지개혁을 서둘렀으나 국회에서 제정된 농지개혁법 내용의 상충된 요소들을 고치는 데 시간이 걸려 시행이 늦어졌다.
-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의 돌풍으로 인해 이승만이 힘들게 당선되었다고 거짓 서술했다.[미래엔컬처 359쪽; 법문사 327쪽]
- 4·19직후 평화통일운동이 좌익세력과 연관된 것임을 언급하지 않

고, 장면 내각의 통일정책을 왜곡 서술했다.[모든 교과서]

- 남한의 농지개혁이 농민들에게 부담스런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왜곡 설명했다.[법문사 317쪽]

- 동백림 간첩단사건을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내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평화통일운동 가들인 윤이상과 이응노를 간첩으로 체포한 조작이라고 왜곡 서술했다.[미래엔컬처 364쪽] ※ 윤이상과 이응노는 북한 간첩으로 활동했음이 분명하다.

-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자 노태우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했다.[미래엔컬처 392쪽] ※법위반자 처벌을 탄압으로 왜곡했다.

■ 교과서들은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실제와 다르게 서술했다.

- 1946년 2월 조직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법률을 제정·집행하고 법률위반자를 처벌하는 임시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상의 정부', '사실상의 정부형태' 등으로 왜곡 서술했다.[모든 교과서]

-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지 않으면서 마치 소유권을 주는 것처럼

기만하는 공산당의 기만술책이었던 1946년 3월 실시된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좋은 토지개혁인 것처럼 왜곡 서술했다.[지학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 ※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한 것처럼 기만했던 북한의 토지들은 1956~58년 기간에 모두 협동농장으로 몰수(국유화)되었다. 또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체제가 좋은 체제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 1946년 2월 북한에서 조직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단독 정부이며, 그 임시인민위원회 주도로 토지개혁 등 공산화로 가기 위한 개혁들이 추진되면서 분단이 시작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남한에서 먼저 단독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북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분단이 된 것처럼 왜곡 서술했다.[미래엔컬처 314쪽; 법문사 318쪽]
- 6·25전쟁에서 미군과 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실제와 다른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파블로 피카소(스페인/프랑스 공산주의자)가 그린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을 양민학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게재하여 사실왜곡에 동조했다.[미래엔컬처 344쪽; 천재교육 327쪽] ※이 두 출판사는 자기들이 이전에 출판했던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피카소 그림 게재하지 않았었는데 한국사 교과서에는 게재했다. 이는 두 출판사가 한국사 교과서에 피카소의 그림을 게재한 것이 상당한 목적의식을 가진 행동임을 의미한다.

- 1950년대 중 후반 북한에서 전개된 천리마 운동 등이 본격적인 사회주의화(토지와 기업의 전면적 국유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자 그것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의 노동력을 강제동원하는 독재적 조치였음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고 왜곡 서술했다.[모든 교과서]
- 북한에서 김일성 1인 독재체제가 실시된 것에 대해 1인 독재체제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1인 지배체제라고만 얼버무렸다.[지학사 제외 모든 교과서]
-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의 원인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미국 등의 경제봉쇄정책 때문이라고 왜곡 서술했다.[천재교육 400쪽]

3. 원인 분석

《한국사》교과서들의 이상과 같은 내용은 학교에서 한국사를 교육하려는 정부의 목적이나, 그에 관한 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된다. 정부의 목적이나 사회의 기대는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애국심을 함양하자는 것인데, 교과서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의식이 조성되도록 서술되어 있다. 다른 나라들의 국사 교과서들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 서술하면서까

지 자기 나라의 건국-유지-발전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사 교과서들은 과거의 사실들을 왜곡 서술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에 대한 부정의식을 유발하도록 서술되어 있다.

《한국사》 교과서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없도록 서술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주된 원인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좌편향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에서 한국 근·현대사 특히 해방 이후의 정치사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그다지 활기를 띠지 않았다. 기성 역사학자들은 현대사에 관련된 사항을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간주하여 과거의 일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역사학자가 연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치부했다. 대부분의 강단 역사학자들은 한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대한제국의 멸망 이후로는 내려오지 않으려 했다. 기성학자들 가운데는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지 않았다. 소수의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은 대체로 한국의 기득권층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해방 이후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유신시기 말 대학가 운동권 출신의 반체제성향 젊은 연구자들이 자기들이 타도할 대상인 대한민국이 잘못 건국된 국가이고 잘못 운영되어 온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상투쟁의 일환으로 진행하면서 활기를 띄게

되었다. 젊은 연구자들의 반(反)대한민국적 연구활동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 연구자들 및 유신체제에서 탄압 받던 비판적 지식인들과 접목되었다. 이들 3자의 접목으로 인해 1979년에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도서가 출판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유신체제가 종식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민중혁명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 혁명투쟁의 사상적 자양분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필요했고, 그러한 부정적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식인운동으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서는 안 될 국가였으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배해 온 것은 친일파들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도서물의 공급을 위해 해방 이후 현대사에 대한 왜곡 서술된 도서들이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처음에는 한 권으로 끝내려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도서명을 가진 무크지가 6권까지 발행되었고,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무크지 형태의 현대사 관련 도서들이 물밀 듯이 쏟아졌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및 그 아류 도서들의 집필자들은 대부분이 학생운동권 출신의 젊은 연구자들이었으며, 그들에 의해 한국 현대사의 연구는 붐을 이루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학에서 운동권 학생들에 인기 있는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1987년 이후 학원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대학의 전임 교수가 되었다. 그 이후 한국 근·현대사 연구는 이들 《해전사》세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들 《해전사》세대는 기존의 독립운동사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중심세력이 되었으며, 그들은 근·현대사연구회 등을 결성하여 조직화되었다.

이들은 대학의 역사학과 등에서 한국 근·현대사 강좌를 거의 독점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반대한민국적 의식에 입각한 한국 근·현대사의 왜곡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독점공급했다. 학생들은 그들의 강의와 그들이 저술한 도서들을 접하고 '대한민국은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투쟁에 참여하거나 《해전사》세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확산시키는 지식인운동으로서 현대사에 관한 논문들을 써냈다. 오늘날 《해전사》세대와 《해전사》의 후예들은 《역사비평》, 《창작과 비평》 등의 계간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전사》세대의 학자들은 이제 역사학계의 중진교수들이 되었으며, 《해전사》의 후예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근·현대사연구단체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역사학계의 헤게모니까지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 동안 관료들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그들은 교육부의 한국사 관련 편수 및 검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들의 영향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한국사》의 근·현대사 부분이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의식을 유도하는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게 된 것이다. 교과서 집필진도 《해전사》세대와 그 후예들이고, 교과서 편수 및 검인정 심의위원들 역시 《해전사》세대들

이니 교과서의 내용이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가 대학의 역사학과 졸업생들이다. 이들은 대학에서 한국 근·현대사 강좌를 독점하고 있는 《해전사》세대와 그 후예들이 독점 공급하는 한국 근·현대사 관련 지식을 전수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스승이 독점 공급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시정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채 고등학교 한국사 및 한국 근·현대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육은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왜곡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자기들에게 왜곡된 지식을 전수한 스승과 선배들이 작성한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 교사들은 설사 왜곡된 지식을 바로 잡은 양질의 교과서가 공급되더라도 그런 양질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간관계 때문이라도 스승과 선배들이 저술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다.

둘째, 그러한 교과서의 제작을 저지하는 정부의 장치와 맨파워가 없다. 그러한 교과서가 제작되지 못하도록 하려면, 교육부가 올바른 편수지침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작성하여 교과서 출판사들이 그 편수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검정 심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진행하여 국사교육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실과 다른 왜곡서술이 내포된 도서들이 검정교과서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우선 한국 근·현대사의 편수지침을 작성할 편수위원 또는 편수관으로 충원될 수 있는 올바른 관점과 지식을 가진 역사학자들을 구하기 힘들다. 이 나라 역사학자들 가운데 올바른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지 않은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연구업적과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편수위원으로 위촉받기 어렵다.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올바른 관점과 정밀한 지식을 가진 학자들은 한국 정치사나 한국 경제사를 전공한 학자들 중에서 약간 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사 교과서의 편수위원이나 편수관으로 충원될 수 없다.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위촉받은 한국 근·현대사 관련 편수위원이나 편수관은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들 중에서 충원될 수 밖에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들의 한국 근·현대사 강의가 좌경학자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고, 그들의 확대재생산 역량이 강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들로부터 편수위원 및 편수관을 충원 위촉한다면 심중팔구 좌경학자가 선정될 수 밖에 없다.

검정위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역사 교과서 검정위원이므로 역사학 전공자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역사학 전공자들 가운데 올바른 관점을 가진 학자들 중에는 한국 근·

현대사를 깊이 연구한 학자가 거의 없고, 한국 근·현대사에 관해 좌경학자의 잘못된 주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한국 정치사와 한국 경제사 연구자들은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사 교과서의 검정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그 결과 올바른 관점을 가진 역사학자가 검정위원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좌경학자들과의 논쟁에서 그들을 제압할 수 없다.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들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에서는 교육목적에 반하는 좌경교과서들이 제작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4. 대책

대책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균형 있게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는 것이다. 필수과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그 전 단계에서는 검인정 교과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올바른 교과서들이 많이 제작되어 검정 교과서 승인 경쟁에서 좌경교과서를 제압하고, 그런 양질의 교과서들이 많이 채택 보급된다면, 좌경교과서들이 교과서

로 되기 어려울 것이고, 교과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교과서로 배울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그런 올바른 교과서들이 많이 제작 보급되면, 좌경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쉽게 노출되어 학생들로부터 그 교과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신뢰성이 상실된 좌경교과서들은 점차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편수지침 작성자 및 검정심의위원들을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올바른 관점과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학자들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다. 현재는 편수지침 작성자들이 좌경 교과서가 제작되기 어렵도록 편수지침을 작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찌면 편수지침이 좌경 교과서사 제작되기 쉽도록 작성될 수도 있다. 좌경학자가 편수위원이나 편수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검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건전한 사상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근·현대사에 관한 깊은 지식을 결여한 인사들인데다가 수적으로도 열세인 탓으로 좌편향적 교과서의 검인정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로 되거나 검인정 교과서로 되거나 간에 좌편향성을 드러내는 한국사 교과서의 저술과 발행을 저지하려면, 한국사를 근대 이전과 근·현대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현대사 부분에는 근·현대사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진 건전한 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수·검정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방식도 현행과 같이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학술적 논거의 유무에 입각하여 논거가 있는 쪽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채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 두 대책은 모두 맨파워 확보의 곤란성 때문에 실천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올바른 관점과 정확한 내용을 갖춘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런 교과서가 제작되도록 유도하는 편수지침을 만들고, 올바른 관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갖춘 교과서만을 검정교과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한국 근·현대사 학자들을 단기간에 많이 양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교(高校)한국사 교과서 '집필진(執筆陣) 이념 성향'



김필재(조갑제닷컴 기자)

■ 학술토론회 토론문(2011.5.20.)

고교(高校)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執筆陣) 이념 성향’ 분석

올해 새로 발간된 6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다수의 좌파(左派)성향 교수 및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이들 교과서 가운데 범문사와 삼화출판사 발간의 역사 교과서에는 좌파적 민중(民衆)사관 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금성출판사) 필진으로 참여했던 2명의 교사가 포함됐다.

■ (주)삼화출판사가 발행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모두 6명의 일선교사로 전교조 및 전교조의 연대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이하 ‘전역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중현(양재고, 전역모), 박범희(중앙고, 전역모), 김쌍규(잠실고), 정행렬(도봉고) 등 4명의 교사 필진이 전교조 회원이며, 이인석(문정고)은 전역모 회원이다.

이 가운데 이인석은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도 참여했다.

전역모는 전교조의 전신(前身)인 ‘전국교사협의회’ 출범 시기와 비슷한 1988년 ‘역사교육을위한교사모임’으로 창립되어 1991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전역모는 현재 2천여 명(전체 역사교사의 1/3)의 역사교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단체는 그 동안 전교조와 함께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일본의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한일(韓日)공동 역사교과서인 《조선통신사》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전역모는 2003년 3월28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상임대표 이해동, 이이화, 김영훈)가 주도한 국군(國軍)의 이라크 파병 반대성명에 ‘역사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단체와 함께 참여했다.

단체는 또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세력의 후예들이 자행한 또 다른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른바 ‘역사교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전역모는 각 지역 산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조직되는 비상시국회의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과 모든 역사교사들의 탄핵무효 운동에 적극 참여를 결의했다.

■ 법문사가 발간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5명의 현직 교사가 필진이다. 이 가운데 최준채(잠신고), 윤영호(한성과학고) 등 2명이 전교조 회원이다.

또한 이인석(삼화출판사 필진 참여)과 함께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필진으로 참여했던 남궁원(서울고)이 법문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 천재교육이 발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6종 교과서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필진(교수, 교사)이 참여했다.

5명의 교수출신 집필자 가운데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박찬승 한양대 국사학과 교수,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임성모 연세대 사학과 교수 등 4명이 ‘역사문제연구소’(이사장 서중석)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다. 이들 가운데 주진오, 박찬승 교수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반대해 온 학자이다.

교사출신 집필진(총3명)으로는 경규칠(세화여고), 송옥란(신현고) 2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교수 출신 집필진 가운데 주진오 교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과 근대화를 긍정한 ‘교과서포럼’(대표 박효종)의 대안교과서를 끊임없이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2008년 12월3일 전북민주동우회에서 12월 월례회의(제목: 위험한 ‘대안’, 위기의 역사 교육)에서 대안 교과서가 대한민국 중심의 역사 서술을 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교과서포럼은 대안 교과서를 출간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글에서 현행 교과서가 북한 현대사를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은 체계 내에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북한 수령 체제의 역사와 ‘한 지평에서 병렬적으로 서술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역사는 ‘보론’의 형식으로 체제를 달리하여 책 말미에 붙였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 후기 정통론적 역사 의식과 서술을 연상시킨다.”

그는 또 남북한 분단 문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소련과 북(北)의 지배 집단이 먼저 분단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여기에 맞서 남쪽도 분단 정부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법이었을까? 같이 분단 정부를 수립해서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는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분단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민족의 통합과 미국과 소련의 타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단을 저지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박찬승 교수(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상임부위원장)는 《마을로 간 한국전쟁》의 저자로 주진오 교수와 더불어 ‘교과서포럼’의 대안 교과서를 비판해왔다.

그는 주진오 교수 등과 함께 계간 《역사비평》을 통해 “교과서포럼의 대안 교과서는 개화파, 식민지배, 이승만, 박정희 등을 정당화하려는 편파적 서술이 많고, 곳곳에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관계를 잘못 적었다”고 말하기도 했다.(2008년 5월28일자 인터넷 한겨레신문)

박 교수는 또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반대했던 인물로 2001년 2

월 강정구(동국대), 조희연-정해구(성공회대), 주진오(상명대) 교수 등과 함께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교수 1인 시위’를 벌였다. (2001년 2월14일자 오마이뉴스, 2001년 2월19일자 교수신문)

이신철 교수는 국보법 폐지론자로 2008년 11월21일 《위클리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일제시대에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던 것은 정당하다. 이후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25를 일으키기도 했다”면서 김일성의 남침을 정당화했다.

그는 또 ‘북한에도 국보법과 같은 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北)의 사회안전법도 국보법과 논리적 구성이나 처벌이 유사하다고 들었다. 정치범수용소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 관건인데 고문여부는 알 길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국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전향장기수 돌려줄 때 북한에게 국군포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북과 시켰던 사람들을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 마치 우리는 북과한 간첩이 없는 것처럼 잡아땀다”면서 북한을 옹호했다.

임성모 교수는 2002년 10월5일 역사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식민지 경험과 박정희 시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2009년 5월27일 노무현이 자살하자 같은 해 6월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주도한 이른바 ‘역사연구단체 6.10 시국성명’에 참여했다.

당시 시국성명은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생(노동자 장애인 빈민을 위한 사회정책), 민주(집회 결사의 자유 보

장), 민족(남북 화해 정책) 문제와 관련된 대책 마련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따른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천재교육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수 출신 필진 5명 중 4명은 역사문제연구소 출신이다. 문제의 연구소(1986년 설립)는 정관에서 “민족사학을 지향하는 역사학의 연구 활동 및 교육지원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의 활동을 보면 《민족해방운동사-쟁점과 과제》, 《민중과 유토피아》, 《카프문학운동연구》 등 사회주의 운동 중심의 역사 단행본을 비롯, 《한국전쟁은 민중에게 무엇이었나(2000년)》, 《1920년대 사회주의와 청년담론》(2004), ‘박헌영 전집 출판기념 심포지엄’(2004) 등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및 대중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연구소 이사장인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온 학자로 2008년 8월24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정부수립’이 더 정확한 말이지요.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좀 창피한 일 아닌가요?”

그는 또 이승만이 “친일파로 하여금 독재정치나 부정선거를 하는데 앞장서게 함으로써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정 수립은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승만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역사문제연구소에는 강만길(고문), 박원순(감사), 임현영(운영위원), 강정구(연구위원) 등의 좌파인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 가운데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은 학계에서 줄곧 국보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해온 인물로 “남한체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통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2003년 11월22일 민족통일학회 발언), “미국을 혈맹으로 보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2004년 1월 31일 同학회 발언)는 등 일관되게 반미-민족공조 논리를 확산시켜 왔다.

박원순(변호사)은 2008년 2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12년 만의 장기독재 끝에 이른 몰골은 바로 민주주의의 압살이다”(박원순 著, 《야만시대의 기록》 서문),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박원순 著, 《국가보안법 3》, 중 160페이지)라는 주장을 해왔다.

임현영(본명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등 수차례 공안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남민전 사건은 1960년대 인혁당, 통혁당사건 관련자들이 출감 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을 규합, 북한과의 연계 속에 결성된 지하공산혁명조직이다. 이 사건은 1970년대를 대표

하는 간첩사건으로 관련자만 해도 84명(불고속자 포함)이 넘었다.

구체적으로 남민전은 안용웅(安龍雄) 등이 월북(越北),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통제를 받았으며, 남한 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戰線旗)’를 제작하기도 했다.

강정구(前동국대 교수)는 줄곧 ‘6.25 남침 유도설’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2010년 6월1일 모교에서 가진 고별강의에서 “천안함 사건화(事件化)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구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역행시키려고 주도한 발악”이라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든 것이기에 ‘사건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2010년 발표한 ‘친북(親北)-반(反)국가 행위자 100인’ 명단에는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학계(전-현직)관계자가 총 17명이 선정 됐는데,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6명이 역사문제연구소의 이사장·운영위원·자문위원·연구위원이다.

해당 명단은 △리영희(2010년 사망, 前한양대 교수), △강정구(前동국대 교수), △서중석(성균관대 교수), △한홍구-정해구(성공회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이다.

■(주)미래엔컬처그룹이 발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교수 출신이 2명, 교사 출신이 4명이다.

교수출신 집필자인 한철호(韓哲昊) 동국대 교수와 김기승(金基承) 순천향대 교수는 2008년 10월8일 역사교육연구회 등 21개 단체와 함께 교과부의 좌(左)편향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안을 거부했던 학자들이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인 한(韓) 교수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분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겨우 화해와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1940년대 냉전시대의 산물인 좌·우편향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역사가 퇴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韓) 교수는 2004년 10월27일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일천인 성명’에 참여했으며,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 주도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과정에 김기승(金基承) 교수와 함께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기승 교수는 ‘한국근현대 사회사상사 연구-배성룡의 진보적 민족주의론’, ‘조소앙이 꿈꾼 세계-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배성룡과 안광천의 국가건설 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0집’ 등 사회주의 계열 인물들을 주로 연구해왔다.

4명의 교사출신 필진 가운데 김인기(등촌고, 고려대 사학과卒), 조왕호(대일고, 고려대 사학과卒)는 2006년 보수성향의 뉴라이트 진영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2006년)을 내놓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시기 《청소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를 내놓았다.

이 책은 근현대사를 서술하면서 김일성의 항일(抗日)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 이승만-박정희에 대해서는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월 혁명’,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승리’ 등의 제목을 달아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주역인 두 대통령을 ‘독재자’로 폄하했다.

두 교사는 또 2006년 5월 월간잡지 《민족21》(62호)과의 인터뷰에서 김일성의 항일, 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생들에게만큼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며 《청소년을 위한 한국근현대사》를 펴낸 마흔아홉 동갑내기 김인기(서울 등촌고), 조왕호(서울 대일고) 교사…….(중략) 이들은 ‘근현대사 논쟁’의 새 판짜기까지를 과감히 선언한다.

같은 대학 사학과 동기로 만나 지난 2003년에는 한국 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의 공동집필까지 맡았던 이들이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불리는 근현대사 논쟁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은 아니냐는 물음에 조왕호 교사가 웃으며 답한다. 하지만 이들이 펴낸 《청소년을 위한 한국근현대사》에는 어딘지 모르게 과거에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 오해(?)를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책이라고나 할까. 한 예로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서술을 들 수 있다.

“동북항일연군은 유격전을 통해 일제에 타격을 주면서 지속적으

로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어 갔습니다…….(중략) 백두산 지구로 진출한 조선인 유격부대들은 국내 진공작전도 전개하여 일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김일성이 인솔한 2군 6사의 보천보 전투입니다.”

일제 강점기 항일무장투쟁은 여전히 우리 학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부터가 웬지 심상치 않은 느낌이다. 증폭되는 궁금증에 대해 김인기 교사가 말을 이어 받았다.

“결국 역사를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이 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교양서적이 될 것이고,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보적으로 보여지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가장 일반적인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두 교사의 이러한 역사적 견해는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접근과 다른 방식을 선보인다.

“우리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온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질문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효순이·미선이 사건 때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쇼트 트랙을 통해 미국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죠. 그만큼 아이들은 미국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인기 교사의 말처럼 책에서는 미국을 굳이 한쪽 코너로 몰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이 역사적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교 역할만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몇몇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각을 담아내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때 건설해 놓은 근대 시설이 남쪽 경제에 끼친 영향은 극히 일부라는 분석과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 발전 신화가 베트남 전쟁과 값싼 노동력 착취로 가능했다는 인식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한국근현대사》는 2005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 친일파 명단을 인용, 이들의 친일 행적을 소개하기도 한다……. (중략)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일은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과거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의 실패가 친일파 득세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부끄러운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들은 《청소년을 위한 한국근현대사》의 인세 수익금 일부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한다. 독립 운동가였던 이승만이 왜 친일세력과 손을 잡았는지 아느냐는 묻는 질문에 논리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청소년이 더욱 많아지는 세상을 그리며, 오늘도 두 교사는 그릇된 역사 인식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교단에 선다.

■ 지학사가 발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모두 5명으로 교수출신이 1명, 교사출신이 4명이다.

교수출신 집필자인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2000년 7월18일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 주도한 국보법 폐지 성명에 75개 대학 1472명의 교수들과 함께 서명했다.

민교협은 좌파성향 교수들의 협의체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민중연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좌파 단체와 연대해왔다.

단체는 2002년 5월30일 250개 단체 공동성명에서 김정일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해 온 한총련, 범민련에 대해 “애국애족과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한 걸 같이 걸어온”, “조국통일의 이름으로 치하를 해도 모자랄 판”, “일신의 안락을 마다하고 오직 조국사랑과 민족사랑에 의거하여 한발 한발 걷고 있는” 운운하며 합법화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2005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 편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 3단체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 파기 촉구 성명에 1008명의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지학사의 교사 출신 필진 4명 가운데 장종근(경기교) 교사는 전 교조 회원이며, 오창훈(반포교) 교사는 교총 출신이다. 나머지 교

사들의 교원단체 가입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비상교육이 발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모두 7명으로 교수 출신이 1명, 교사 출신이 6명이다.

교수출신 필진으로 현대사 부분 집필에 참여한 도면회 대전대 교수는 교과부의 좌(左)편향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안을 거부해온 학자다. 그는 2008년 11월11일 역사학자 676명이 참여한 ‘전국 및 해외 역사학자 선언문’의 서명 및 모금 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교과부의 수정권고 조치에 대해 선언문은 “교과부의 수정권고는 정부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역사만 서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적 가치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도 교수는 고은(시인), 백기완(사회주의자), 서중석(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등과 함께 남로당 수괴(首魁) ‘이정(而丁)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강정구(前 동국대 교수), 이종석(前 통일부장관) 등과 함께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비상교육 교과서의 경우 6명의 교사출신 집필자 가운데 2명이 교총출신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출신 필진의 교원단체 가입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호헌(護憲) 세력의 승리로 끝난 미국(美國)의 ‘역사(歷史)교과서 논쟁’

미(美)상원 “정부지원 받는 연구자들, 자유와 번영 증진시킨 미국사(美國史) 존중해야”

“조지 워싱턴은 지나가는 인물로 묘사될 뿐이다. 미국 헌법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대신 대(大)불황은 세 차례나 언급된다. 학생들이 토머스 에디슨,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배우지 않게 된다. 전 세계를 보다 낮게 만든 미국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매카시즘’은 19차례나 언급하면서 미국이 자유국가의 방패가 되고자 했던 ‘냉전의 본질’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상원 역사표준서 논쟁, 1995년 1월18일 슬라이드 고티스 미상원의원)

조지 부시(George Bush) 美대통령은 1989년 미국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역사학을 포함한 5개 교과목의 표준서 개발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91년 ‘전국 역사표준서 프로젝트(National History Standards Project)’가 수립되어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을 위한 표준서’(이하 ‘역사표준서’, National History Standard) 개발 작업이 추진됐다.

1992년 봄부터 시작된 역사표준서 개발 작업은 당면한 역사교육의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 및 논의과정을 거친 뒤 1994년 완성

됐다. 역사표준서는 그러나 출간—공표되기도 전에 미국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애국적 인물들을 누락시키고, 소수의 관점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면서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역사표준서 출간을 위해 거액을 지원했던 린 체니(Lynne Cheney) ‘전국인문학기금’(NEH) 전(前)의장은 “역사표준서가 정치화된 역사를 통해 반란을 꾀하는 기성학자(좌파)들의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린 체니의 뒤를 이어 미국의 보수 진영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역사표준서를 비판하고, 표준서를 작성한 학자들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는 등 표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역사표준서를 비판한 미국 내 보수인사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표준서를 통해 좌파세력이 미국의 역사를 정치화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특히 역사표준서에서 서양문화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인문주의우파(The Humanist Right)’로 알려진 교육비평가 집단의 윌리엄 베넷, 앨런 블룸, 린 체니, 저투르드 힘멜파브 등의 인물들이 “인문학 교육은 서양문화에 뿌리를 둔 이상과 지식을 전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럽의 정치적, 철학적, 문학적 유산이 미국의 다원(多元)적인 국민을 결속 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문화적 통일성이 1960년대 이후 대학을 장악하고, 서양 대신 인종, 계급, 성(性)에 관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마르크시즘’과 ‘페미니즘(Feminism)’ 성향의 좌파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문주의우

파' 인사들은 경고했다.

서양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는 두 번째 집단은 앨버트 샌커가 의장으로 있는 '미국교사연합(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전국본부가 그 중심이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냉전(冷戰)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살아남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지속여부는 미국인을 결속시키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치적 비전(vision)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는 데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서양 민주주의의 역사가 교과과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문주의우파'와 '미국교사연합'은 모두 학생들이 고대 아테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17세기 영국 등지의 고전 문헌에서 언급한 정치-철학-미적 진리를 탐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세계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사건이나 변화도 그 중요성이 고전(古典)의 진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역사표준서 문제 제기와 더불어 1994년 11월14일 미국의 저명한 보수논객인 존 레오(John Leo)는 '미국 역사의 납치'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미국의 표준서가 1960년대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의해 반(反)문화적 관점에서 쓰였다"고 비판했다.

존 레오는 당시 "역사표준서가 크든 작든 모든 봉기와 반란을 언급했는데, 이는 그들이 미국을 억압적인 국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백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밖에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사표준서는 다문화주의가 과도해서 백인이나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온데간데 없고, 인디언, 흑인, 여성(페미니즘)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미국이 이제껏 자유와 평등을 강조해 온 것은 엘리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서 인디언 학살과 흑인의 노예화만을 강조했다”고 존 레오는 비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존 레오는 역사표준서를 공식표준서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보수진영의 적극적 대응은 결국 의회 논쟁까지 이어졌다. 공화당의 슬레이드 고튼(Slade Gorton) 상원의원은 1995년 1월 18일 상원 연설을 통해 “표준서가 반(反)서양적이고 미국 역사교육에 위협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고튼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이날 상원은 99대 1로 역사표준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滿場一致)’였다.

당시 역사표준서는 상원으로부터 비(非)미국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자들은 세계 자유와 번영을 증진 시킨 미국 역사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받았다. 미국에서 공교육이 시작된 이래 줄곧 주(州)정부의 소관이던 교육문제에 상원이 관여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이었다. 1994년 가을부터 시작된 역사표준서에 대한 보수진영의 문제 제기는 1996년 봄까지 무려 18개월이나 지속됐다.

이로 인해 좌파 성향의 표준서 개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수정(修正)주의 사관(史觀)에 입각해 작성된 역사표준서를 개정, 1996년 4월 새로운 표준서를 출간해 역사교과서 논쟁은 막을 내렸다. 당시 역사표준서 개정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교육회의(Council for Basic Education)를 비롯한 몇몇 재단이 구성한 패널의 권고에 따라 문제가 됐던 ‘학습예제’를 삭제했다.

둘째, 과학, 기술, 경제사, 지성사를 강화했다. 논란이 됐던 ‘헌법’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고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제임스 메디슨 등의 이름이 삽입됐다.

6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 총 37명 필진 가운데 17명(46%) 좌파

	전교조 (교사)	역사문제연구소 (교수)	좌(左)편향 교과서수정반대 (교수)	국보법폐지 (교수)	좌파성향필진 (중복인원제외)
삼화출판사 (교사 6명, 교수 無)	4명	X	X	X	4명
법문사 (교사 5명, 교수 無)	2명	X	X	X	2명
천재교육 (교사 3명, 교수 5명)	2명	4명(주진오, 박찬승) (이신철, 임성모)	2명(주진오, 박찬승)	1명(이신철)	6명
지학사 (교사 4명, 교수 1명)	1명	1명(정재정)	X	1명(정재정)	2명
미래엔컬처그룹 (교사 4명, 교수 2명)	X	X	2명(한철호, 김기승)	1명(한철호)	2명
비상교육 (교사 6명, 교수 1명)	X	1명(도면희)	1명(도면희)	X	1명

‘建國節 제정 反對’ 역사단체 회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대거 참여

출판사	교수출신 집필진	건국절(建國節) 제정 반대 단체 참여 인원
천재교육	5명	4명(역사문제연구소)
지학사	1명	1명(역사문제연구소, 역사교육연구소)
미래엔컬처그룹	2명	1명(한국근현대사학회)
비상교육	1명	1명(역사문제연구소, 역사교육연구소)
삼화출판-법문사	無	無
총원	총 9명	총 7명

토론



이주영, 양동안, 이주천, 제성호, 조영기, 김필재

■ 토론 녹취록

고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점

■ 김필재(조갑제닷컴 기자)

좌편향 국정교과서 취재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실들, 학자가 아닌 만큼 기자로서 겪고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교육관련 입법기관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새로 발간된 6종 좌편향 국정교과서에 대해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보면, 좌편향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상할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집필진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교과서를 통과시킨 교과부, 대통령 모두 문제가 있다.

집필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새로 발간된 고교한국사 교과서 필진을 보면 전교조 교사, 과거 좌편향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안을 거부했던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필진 중 좌파단체 국보법 폐지 성명에 서명했던 학자, 남로당 수괴인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자도 있었다. 교사 필진이 28명인데 이 가운데 9명이 전교조 소속이고, 교수 필진 9명 중 7명이 2008년 건국절 제정을 철회하라던 역사단체 회원이다. 총 인원 37명 중 17명, 즉 절반에 가까운 46%가 좌파성향이다. 최근에 더 찾아보니까 노무현 정권 때 좌편향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2명이 더 들어가서 실제로는 51%가 좌파성향이다. 이미 절반이 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9명의 교수 필진이 속한 역사단체는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4개로 압축된다. 이 4개 단체가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건국절을 제정하려는데 반대했다.

특히 역사문제연구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역사문제연구소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사 교과서 필진이 6명이다. 교수 출신 필진 9명 중 6명이 이 학회 출신으로 압도적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이사장인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의 경우 공개석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건국이란 표현을 아예 쓰지 않는다. 그는 남북한 정부 수립론을 주장한다. 그는 2008년 8월 24일 국내 모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학회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대로 필진으로 참여했다.

6종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건국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는

출범이란 용어로 통일해 쓰고 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입각한 대한민국 탄생을 불행한 사건처럼 해놓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건국에 앞서 총선거, 국회구성, 헌법제정, 정부수립의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건국의 마지막 단계로 정부수립이 있었는데 이들 교수 출신 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문제의 좌파성향 교과서 필진들이 건국이란 표현을 배제해서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대한민국과 동일선상에 놓았다.

이 문제를 갖고 교육평가교육원 관계자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물어보니, 교과서 필진 선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출판사 고유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평가교육원이 사전에 교과서 필진을 걸러낼 권한이 없는 상태다. 그럼 교과서 필진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가 물어 보니,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교수, 교사는 누구든지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교수출신 역사 교과서 필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9명 중 6명이 역사문제연구소 소속인데, 역사문제연구소는 사회주의 시각에서 한국사를 재조명해 온 단체이다. 주요 인사도 서중석 교수, 좌파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학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강만길 교수는 고문으로 활동 중인데, 남한 체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통한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감사를 맡고 있는데, 최근 미 RFA와

의 인터뷰에서 북한 고문 실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서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임현영은 과거 중앙대 교수였고, 현재도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1979년에 북한과 연계된 지하혁명조직인 남민전 사건의 연루자로 감옥에도 갔다 왔다. 강정구 교수도 여기에 속해 있는데, 전 동국대 교수인 그는 6.25전쟁을 북한이 시도한 통일 전쟁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리고 다녔다.

마지막으로 이 교과서 필진 성향을 정리하면서 우리 미래가 도난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기감이 들었다. 러시아 공산혁명을 했던 레닌이 한 말이 있다. “한 세대의 젊은이들을 맡겨 달라,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꿔 버리겠다.” 공산화시키겠다는 말이다. 이 말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게 되었다.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고 본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좌파 역사 교육, 교과서 쿠데타를 막지 못하면 가까운 미래에 엄청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어엎는 좌익혁명 투사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싸워야 한다. 미국에 좋은 사례가 있다. 미국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두고 좌편향 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있다. 미국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인 역사 표준서 논쟁이 좋은 사례가 된다. 역사 표준서 같은 경우 미국 헌법,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 대해 전혀 기재를 하지 않았다. 1994년부

터 1996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의 보수진영이 들고 일어났다. 칼럼을 쓰고 교과부에 가서 데모도 했다. 그 결과 보수가 승리했다. 2년 넘게 해서 승리했다. 미국 상원에서 99대 1로 역사 표준서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것이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싸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힘도 필요하지 않나 본다.

■ 이주천 교수(원광대 사학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교과서 6종을 보면 <강만길 교수 인식+386 운동권 친북 시각>의 합작품이라 생각된다. 강만길 교수 인식론이란 좌우합작, 남북간의 협상통일론의 강조이다.

남북관계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정일을 만나서 환하게 웃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그의 후계자, 추종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역사 용어에 혼동이 나오고 있다. 독립운동인데 민중운동의 전개가 되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우리민족끼리'와 유사하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전부 민족운동으로 만들었다. 흩어진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독립운동인데, 독립운동을 민족운동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간의 정부 수립을 얘기하면서 양비론으로 남북한 정부를 다루고 있다.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도 많이 있다. 하지만 1948년 갑자기 귀국해서 대통령이 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어떤 설명도 없다. 무장투쟁독립운동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데, 설명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잘 된 것은 무엇이나, 누구 때문인가. 노동자, 대중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민중사관으로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를 보면서 조광조가 연상되었다. 조광조 세력은 전국의 사림파를 당쟁으로 몰아가서 나라를 망쳤다. 80년대 운동권들이 문화권력을 장악한 상황이다. 중고교 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까지 많이 부정적이다. 그 이후의 대통령은 아닌데, 친북적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의 반공정책이 매우 잘못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좌익탄압조치, 4.3사건도 경찰이 탄압하니까 저항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특징을 정리해 보면 반대한민국이고, 반이승만이고, 반박정희이고, 친북적인 성향이 있다. 4.19, 5.18 등 정부와의 갈등 부분, 민주화라는 부분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 반정부적 성향이 너무 강하다. 정부에 반하는 세력을 양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우파 성향의 사람 중 한국사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좌파성향의 사람들이 한국사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왕따 당하면 끝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본다.

■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실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 가령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가 있다. 하지만 해는 붙박이 별이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 하지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관점은 대학에 가서 학문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초중등학생에 있어서는 상식에 입각한 일반적 지식,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지식을 전달하고 깨우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마치 대학생들이 이해하고 논의할 것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입장에서 독립전쟁을 수행하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든 훌륭한 대통령이다. 하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반란군 총사령관, 반란군 수괴이다. 미국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조지 워싱턴을 반란군 총

사령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건국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 나라의 발전 과정에 있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을 8, 못한 것을 2 정도 얘기한다. 미국 형성기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많이 희생시켰다. 역사에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거나 소수 민족을 보호한다거나 인권을 보호하는 식으로 해결한다. 역사 교육이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고 정신과 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환이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190여 개 국 중 오늘날 2만여 불을 달성하고, 짧은 시간에 근대화를 이룬 나라이다. 1950년 67불에서 현재 2만 불을 달성했다면 300배의 GNP로 끌어올린 것이다. 경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성과를 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성공한 나라를 실패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편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공지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적에 대해서는 싸워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한다.

현재 교과서는 민족주의 사관, 민중사관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데 반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균형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1946년 6월 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읍발언을 했다. 이를 부각시켜서 분단은 대한민국이 먼저 했다고 주장한다.

분열주의, 반통일세력, 친미세력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1945년 12월에 이미 스탈린의 비밀지령을 통해 북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북한을 위성국가화했다. 분단을 선택한 것은 북한이다. 그 책임을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를 돌이켜 볼 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한 것이다. 전 한반도가 공산화로 가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정부 수립이 최선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으로 남쪽만이라도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과 빨치산에 대한 시각이다. 한국전쟁에서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구체적 사건까지도 거론하면서 삽화를 통해 잔혹상을 부각시키면서도, 북한군의 민간인 전시 납북과 연행과정에서의 학살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민재판에 의해 이뤄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편향을 보이고 있다.

3대 부자 세습에 대해 권력계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세습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1개의 교과서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얘기하지 않고, 북한 이탈주민에 비중을 두어서 다루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다. 핵 실험을 두 번이나 했는데, 핵개발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굶주림, 아사를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 책임인가. 북한이 개혁개방 하지 않고 있는데, 3억-5억불을 들여 핵개발에 나

서고 있다. 그 돈으로 북한 주민을 지원하면 되는 데 하지 않는다.

끝으로 교과서들은 동학란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학가에서 동학란은 좌파세력의 의식화 교육교재에 나오는 것이었다. 동학란은 반봉건 민중항쟁, 반외세 자주투쟁에 있어 교과서적 사건, 전범이었다. 이에 대한 서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2006년 7월에 부산 전교조 통일학교 자료집을 언론에 공개하고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부산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교조의 핵심세력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 때 공개한 자료집을 보면,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베낀 부분이 나온다. 좌편향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 북한의 《현대조선역사》와 북한의 노선과 유사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인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고 있는데, 검인정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토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검인정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우파 NGO에서 문제 있는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을 채택토록 유도해야 한다. 그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역사교과서 내용과 관련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교과서의 상당 부분은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있는데, 통일교육지원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 통일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사기관에 고발만 해도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인정은 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에 해당되면 그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해서 벌금형 등을 넣어서 억제할 수 있다.

■ 조영기 교수(고려대 북한학과)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역사 교과서가 불량식품이 됐다. 역사 교과서가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이 불량해지고, 역사인식이 불량해지면 국가의 정체성이나 애국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역사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우리 청소년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국가관으로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이 훼손되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고 국가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역사교과서에는 국가정체성이라든지, 애국정신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가 아니고 실패한 역사이고 회복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역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청소년 교과서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기본적으로 큰 줄기는 두 가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우선 계급사관 또는 민중사관에 의해 역사 교과서가 기술되어 있다. 두 번째는 북한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세 가지 정도 지적하겠다. 우선 단정과 관련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이 1946년 2월 북한에서 세워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틀이 되었던 정강 20개조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강 20개조가 발표된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 암시한 것이다. (이에 분단의 책임을 단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토지개혁과 관련된 것이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은 처음부터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의도가 토지개혁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하나는 북한 인민에 대한 대사기극이었다. 46년에 발표하고, 48년에 토지개혁이 완성되고, 6.25전쟁이 끝난 후 54년부터 협동화를 시작한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토지개혁을 해서 개인에게 분배를 했는데, 보통 재산권은 4가지가 완비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인 소유권이고, 이용권이고, 처분권이고 양도권이다. 북한은 유일하게 이 4가지 요소 중 이용권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54년부터 협동농장으로 시작하면서 개인이 갖고 있던 이용권마저

국가가 가져갔다. 이런 것에 대해 교과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토지개혁과 관련해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사적 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만든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산몰수와 관련한 것이다. 북한은 중요한 재산은 모두 국유화했다. 은행, 광산, 하천까지 전부다 국유화했다. 이것은 체제 자체를 사회주의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미군정 재산을 불하하면서 사적소유이고 시장경제를 확립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역사 교과서에서 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한 가지는 천리마 운동과 새마을 운동이 대비하고 있는 데,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산업생산력을 높였다고 기술하고 (우리의) 새마을 운동은 정치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에서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다.

교과서 자체도 불량 교과서인데, 문제는 이 불량 교과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불량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놓아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불량한 지도를 하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가르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 전교조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사람들을 퇴출하는 학부모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주영 교수(전 건국대 부총장)

이번에 한국사교과서검정위원으로 참여했다. 그전에도 한국근현대사 7차 교육과정을 비판해 오면서 교과서를 검토해 왔다.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말씀 드리겠다.

과거에 한국사 교과서는 국가의 정체성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 이기에 정부가 맡아서 했었다. 국정으로 해서 나라에서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었는데, 하다보면 미비한 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미비한 점에 대해 좌파들이 집요하게 공격했다. 계속 트집을 잡았다. 이에 집필자들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안 하려고 했다. 또 출판업자들이 교과서 시장이 막대한 시장이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에 출판사들이 자유롭게 응모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내용을 검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검인정으로 바뀐 것이다. 이번의 경우 13개 출판사들이 출품했고, 몇 차례에 걸쳐 검정을 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3개 교과서 중 6개만 통과되었다. 가장 좋은 것들이 선정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점수를 매겨서 선택된 것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교육부에서 산하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 관장토록 일임하고 있다. 역사를 담당할 공무원 한 두 명이 이를 관장한다. 그게 공무원들이 관장하기 어렵고 책임을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위원회에서 역사 교과서

를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서술하고 제작할 것인가의 방침을 만드는데, 이를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이 교육과정에 장, 절, 작은 제목까지 다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집필 기준이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토대로 필자들은 쓰고, 출판사들은 제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출품하면 검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교과서에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두 번 참여했는데, 첫 번째 가서 토론도 안 되고, 토론으로는 관철시키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서 두 번째 참석할 때 13개 출품된 교과서들에 나온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을 뽑아서 검정위원들에게 배포하고 내 입장이 이렇고, 관철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후 검정위원 중 2명이 찾아와서 검토해 보았는데, 어떤 문제는 수용하고 어떤 문제는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혀 조금 수정될 수 있었다.

어떤 검정위원이 들어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맨 처음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세부화한 집필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에는 기본틀이 있다. 역사학자들은 이 틀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틀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 사관은 민족주의 사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중주의 사관이다. 즉 민

주주의 시대에 민중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론을 변형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민중주의란 이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민주주의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통일이 지상과제이고, 어떤 이념을 가졌든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져온다. 이 민족주의, 민중주의에 역사학계에 유행하는 이론이 더해지는데, 연세대 김용섭 교수가 주장해서 많이 확산된 것이다. 근대화, 민주주의사회로 간다는 것은 서양에서 가져올 필요 없다. 근대적, 진보적인 요소는 우리 역사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으로 소위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것이다. 이 내재적 발전론이 민족주의사관, 민중주의사관을 형성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틀이 깨지지 않는 한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도 소용없다. 이 틀은 북한의 틀과 같다.

그럼 민족주의, 민중주의 사관은 언제부터 형성되었느냐. 이것은 교과서가 언제부터 좌경화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다. 일찍이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 때부터다. 북한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주체성, 한국적 민족주의 등을 강조하며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 7·4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에 민족주의가 팽배했고, 그것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한국 역사를 위시한 한국학을 진흥시켰다. 1970년대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는 많은 연구비를 주었고,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많이 주었다. 자라서 상당수가 좌익이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와서는 독립운동을 강조했다. 민족주의의 한 편에 있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을 건립했다. 상당수 좌익이 되었다. 이에 이렇게 된 데 대해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딱 잡아서 얘기하기 어렵다.

이미 교과서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좌경화되었다. 그리고 민족주의, 민중주의 사관이 약간 표현이 다르고, 거칠고 세련되고의 차이 지 남북한이 똑같다. 한반도는 지금 민족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를 무엇으로 대체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나.

우선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이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의 구성원으로 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들고 나와야 하는데, 민족 앞에서 국민이나 국가는 그냥 사라진다.

민족이란 말에는 북한까지 같이 포함되게 되니까, 북한은 공산주의체제니까 민족으로서 끌어만 안으면 공산주의를 저절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 레닌을 읽을 필요가 없다. 북한을 동포로서 끌어안으면 공산주의를 다 옹호하게 되는 것이다.

민족주의 대신 대한민국 국가주의, 국민주의를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 아직 희망이 있다. 민족주의의 지상과제가 통일인데, 통일은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민족 대신 국민이란 것을 의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통일된다고 하는데, 북한에게 한민족이란 말은 없다. 태양민족, 김일성 민족이라고 한다. 한민족과 태양민족이 어떻게 통일하는가. 민족이 다른데,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통일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국민주의 사관이 영어로는 national history이다. 미국, 독일의 경우 민족주의 사관을 의미한다. 오늘 한국현대사학회가 출범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민족사관 대신에 건국사관으로 하자고 했다. 뜻은 같지만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국민사관, 국민주의 사관이 맞다.

또 하나 민중주의를 대신할 것은 자유주의 사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자유민주적 질서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이다. 자유주의 사관을 내세우면 된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 사관을 제시하면 된다.

국민주의 사관이나 자유주의 사관은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다 있는 역사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 민중주의 사관 대신에 국민주의 사관, 자유주의 사관만 사용하게 되면, 큰 틀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에 요구할 때에는 민족주의, 민중주의 사관도 일리가 있지만 대한민국을 의식하는 국

민주의 사관, 자유주의 사관을 반영시켜 달라 하면 조금씩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인 국가, 국민의 개념이 없다. 1948년 건국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정부수립이라고만 쓸 수 있게 해 뒀다. 교육과정이나 집필기준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지만, 역사학계 일부에서 주장되는 1919년 건국설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그들의 주장은 조선은 1910년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은 1919년에 망했다는 것이다. 순종은 일본 사람이 세운 왕이니까 왕도 아니고 진짜 마지막 왕은 고종인데, 고종이 1919년에 죽었으니까 대한제국이 그때 망한 것이란 것이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져서 1919년에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1948년에는 정부만 세운 것이고, 우리도 하나 세우고, 북한에도 하나 세운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건국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수립은 건국이나 마찬가지다.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 절차가 처음에 총선거를 하고, 두 번째 국회를 구성하고 세 번째 헌법을 제정하고, 마지막 단계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건국 과정을 끝낸 것이다. 그런데 정부 수립은 건국이 아니라는 것이 교과서에 들어 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다. 이것은 북한과는 다른 나라다, 새로운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검정을 하는데, 교육과정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과거에는 교과부에서 교수, 교사들을 몇 십 명 모아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 민중주의가 들어 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정을 하는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과정을 만들고, 검정하는 것을 특정한 사람, 특정한 위원회에게 책임을 지워줬다는 것이다.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나아졌다. 공무원들이 숨어서 아무 의미 있는 수십 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는 실명을 밝혀서 하는 경우에 조금 더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사편찬위원장이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북한에 대한 서술이 너무 많다면서 그것을 상당히 줄이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대상에게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역사학계는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섞여찌개로 되어 있다. 교과서포럼에서 만든 교과서, 이동복, 이대근, 유광호 선생 등과 함께 만든 《한국현대사 이해》에서도 북한사를 완전히 부록으로 떼어 뒀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교

과서는 북한사와 대한민국사를 마구 섞어 두었다.

이에 교과서에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주의 사관, 민중주의 사관 대신에 국민주의 사관, 자유주의 사관으로 대신하면 된다고 본다.

■ 이주천 교수(원광대 사학과)

《해전사》문제가 나왔는데, 운동권들이 《해전사》를 텍스트북으로 해서 좌경화되었다. 최근 출간한 《한국근현대사》의 경우 교과서 집필진들이 철저히 외면했다. 딱 한 가지 남침만을 받아들였다.

우파 역사학자들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사관을 가르칠 교재가 없다. 교재를 만들어야 하고, 역사와 비평과 같은 우파 잡지, 우파 역사학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력싸움에 밀리고 있다. 좌파는 역사학자들이 아니어도 역사관련 서적을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선전술, 라이팅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양동안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사관을 배제해야 한다. 사관을 가급적 배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리고 민족주의 사관이나 국민주의 사관이나 영어로는 똑같이 nationalism이다.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만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인식만은 분명히 하면 된다. 남한에서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사관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집필자들이 완벽하게 어떤 사관에 의해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느냐는 알 수 없다. 보아 왔던 책들에 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기소하기가 문제 있다. 사관 때문에 그랬는지,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잘못 쓴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관점이 많이 들어 와 있는 것은 북한 책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제를 대한민국 관점 혹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한 가운데 그것을 토대로 교과서를 써야 하는 데 북한 책을 그대로 객관적인 지식인 것처럼 옮겨 놓았다.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다.

■ 이주영 교수

지금은 사관이 필요하다. 상대가 민족주의 사관, 민중주의 사관을 분명히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사관을 제시해야 한다. 있었던 그대로 기술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원칙이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교과서 검정 과정 중 발견한 것이 있는데 좌파들이 사료를 변조한다. 동학은 내재적 발전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서양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우리는 근대화할 수 있었고, 이것은 동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적인 요소라고 교과서에 흔히 나오는 것이 폐정개혁안인데, 동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어떤 사료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꼭 한 군데 나오는 데 1940년대 오지영이라는 사회주의자가 동학에 대해 쓴 《역사소설 동학사》이다. 40년에 나왔는데, 그 책을 다시 출간을 할 때 역사소설이라는 부분을 빼고 《동학사》로 냈다. 이런 식으로 변조를 했다. 그런데 저자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동학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주입, 사회주의적 사관을 반영했다. 이런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사관이 필요하다.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공산당원인 피카소가 국제공산당의 요청을 받아서 반미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런 것을 사관의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주천 교수

이주영 교수님보다 좀 더 비관적으로 본다. 이 교수님이나 저는 한국사를 가르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관, 국민주의 사관을 가르칠 교재도 없다.

국사편찬위원회 대부분이 좌익 소속인데 이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단, 연구비, 학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왕따 당하면 끝

나는 것이다. 끼지 못하면 안 된다.

60, 70년대 민족주의 사학에 박정희 책임이 있지만, 그때는 전교조가 없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좌경화된 사람들이 힘과 조직, 돈을 갖고 교과서 문제 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았다. 지금과는 다르다.

2008년 촛불 시위 후 청와대에 갔을 때 전교조 문제를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것이 정권의 헤게모니와도 관련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볼 때 5.18 이후 민족주의란 그전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좌경화되고 친북적이고 집단적이다. 그런 점에서 사태가 심각한 것이다.

이런 대책이란 탁상공론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본다.

■ 이주영 교수

지금 자유주의 사관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있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윤치호와 같은 경우를 부각시키면 된다. 105인 사건의 중심인물이 윤치호인데 현재 교과서의 경우 윤치호를 배제하고 있다.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복원해야 한다. 국민주의 사관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발전시킨 사람들을 드러내면 그것이 국민주의 사관이 된다. 지금은 전부 그것을 무너트리려는 세력만으로 교과서를 만드니까 문제이다.

국사편찬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들도 변화하는 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필진들을 보면, 교수는 1명 내지 2명이
고, 어떤 책은 고교 교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쓰인 것도 있었다. 비
교적 그래도 좀 나은 교과서들(삼화, 지학사)이 있는데, 전부들 전
교조 출신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7단원, 8단원이 있는데, 7단원
에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을 보면 근현대사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
오는 사진이 김구, 그 다음이 김일성, 모택동이고, 그 다음이 안창
호, 여운형이 많이 나온다. 이승만의 경우 흔한 독사진 하나 없다.
김구와 둘이 찍은 조그만 사진, 박정희는 우표에 나온 사진 하나가
나왔다. 삼화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는 앞의 7단원 곁에 이승만 사
진 큰 것을 제시했고, 8단원 곁에 박정희 사진을 제시했다.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아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

제2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의 편향성과 개선방안

1 발제문 : 공무원임용시험 한국사과목 현대사문제의 사상적 편향성 분석/ 양동안

2 토론문 : 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의 분석 및 개선방향/ 모준영

3 토론 : 이주영, 제성호, 배진영

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의 사상적 편향성 분석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국회정책토론회 발제문 1 (2011.2.18.)

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현대사 문제의 사상적 편향성 분석

I. 분석 대상

분석대상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7급과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에 출제된 현대사 관련 문제들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사를 편의상 2개 시기, 즉 일제시기(구한말에서 해방 직전까지)와 해방 후 시기(해방에서 현재까지)로 구분했다. 2006년 이전의 공무원 임용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기술적인 이유(문제은행 특성)로 공개하지 않아서 분석이 불가능했다.

II. 개별 시험지별 분석

〈1〉 2007년 7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3개다.

① 박정희 정권 기 경제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다음은 어느 성명 또는 선언의 내용인가?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73년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

③ 다음은 해방 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이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발표,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위의 3개 문제는 모두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그 가운데 ①번 문제는 특정 사상성향의 응시자들에게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②번 문제는 남북한 사이에 발표된 성명 및 선언의 내

용을 잘 알고 있어야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남북한 사이에 발표된 성명 및 선언의 내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은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비운동권 응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운동권과 가까운 생각을 가진)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다. ③번 문제는 친일파문제나 해방 후 좌익 및 중간파의 활동을 잘 알아야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친일파문제나 해방 후 좌익 및 중간파의 활동에 관한 관심과 지식을 보다(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는 해방직후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주도세력의 활동에 관련된 사건은 하나만 예시하고 나머지 3개는 친일파문제나 해방 후 좌익 및 중간파의 활동에 관련된 사건으로 예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출제자가 좌경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현대사 문제 3개 가운데 2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3개 문제 가운데 2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2〉 2007년 9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4개다.

① 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그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연구·조정하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소·중의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우익세력은 대대적인 신탁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신탁통치에 대한 의견차이로 좌익과 우익은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로 결렬되었다, ㉣좌익 세력은 처음부터 찬탁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② 다음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서술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③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8년 김일성은 남로당과 연안파 인사들을 배제하고 북한정부를 구성하였다, ㉡1965년 한국군은 UN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1969년 3선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간접선거를 통해 1971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72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수령 유일 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④ 다음은 항일 의병 운동의 시기별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나)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위의 4개 문제 중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는 ②번과 ④번 문제 2개이며, 이들 두 문제는 운동권이나 비운동권의 관심과 지식이 비슷한 사항에 관한 문제이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2개 문제 중 ①번 문제는 운동권이나 비운동권의 관심과 지식이 비슷한 사항이다. ③번 문제는 남한의 정치사는 물론 북한 정치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진 응시자가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북한의 정치사에 대해서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비운동권 응시자들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 2개 중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 유리한 문제이다.

현대사 문제 4개 가운데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 2개 중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3〉 2008년 7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개 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5개다.

①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다음 자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1946년 10월 좌우합작위원회가 발표한 좌우합작 7원칙에 관한 성명문이다(필자 주: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면관계상 인용하지 않음).

㉠좌측은 토지의 유조건 몰수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민족 운동 진영이 주도하였다, ㉢좌·우측은 반민족 행위자 처리 문제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좌·우측은 합작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③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해방직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의 5개 문제 중 ③번 문제와 ⑤번 문제는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이며 특정 사상성향의 응시자에게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들이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들인 ①, ②, ④ 3개 문제 가운데 ①번 문제와 ④번 문제도 특정 사상성향의 응시자에게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좌우합작운동에 관한 ②번 문

제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해방직 후의 좌우합작운동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관심과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현대사 문제 5개 가운데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 3개 가운데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4〉 2008년 9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개 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3개다.

① 다음의 성명(필자 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의 일부)이 발표된 이후 시작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②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전문의 서두이다. (가), (나), (다)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을 〈보기〉에서 골라 옳게 배열한 것은?

③ 다음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우리 정부의 정책(필자 주: 농지개혁)과 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의 3개 문제 중 ①번 문제는 일제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 성향의 응시자에게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2개 문제 중 헌법 전문에 관한 문제인 ②번 문제는 어떤 성향의 응시자에게도 유·불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농지개혁에 관한 문제인 ③번 문제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농지개혁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여타의 응시자들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 2개 중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현대사 문제 3개 가운데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 2개 가운데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5〉 2008년 상반기 지방7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개 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3개다.

- ① 한국 근대역사학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일제 강점기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1926년 발표된 다음 선언서(필자주: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인 정우회의 선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의 3개 문제는 모두 일제시기에 관한 것들이다. ①번과 ②번 문제는 특정 사상성향의 응시자에게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정우회 선언서에 관한 문제인 ③번 문제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그들이 일제 하 공산주의운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 문제 3개 가운데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는 없다.

이 시험지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해방 후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려는 응시자들을 상대로 한 시험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한 문제를 1개도 출제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6〉 2008년 상반기 지방9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개 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4개다.

① 192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다음의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8·15해방 직후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건국 작업에 들어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좌파와 우파 인사들로 조직되었으나, 좌파의 득세로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탈퇴하였다, ㉢국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조선건국동맹이 모태가 되었다.

③ 다음 글(필자주: 신채호의 글)을 쓴 역사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은?

위의 4개 문제 중 ①번과 ③번 문제는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그 중 ①번 문제는 특정 사상성향의 응시자에게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③번 문제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신채호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는 ②번과 ④번 문제이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에 관한 지식이 보다 많아야 정답을 알 수 있는 ②번 문제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남북협상(남북연석회의)에 관한 지식이 보다 많아야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인

④번 문제도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현대사 문제 4개 가운데 3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 2개 중 2문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7〉 2008년 하반기 지방7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5개다.

① ‘7·4남북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들만 고른 것은?

② 다음 글에 나타난 한국사의 인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문은 한국사에 대한 식민사관의 관점을 서술한 것이다.

③ 6·25전쟁 중의 휴전회담과 휴전협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해방 이후의 경제정책과 경제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970년대에는 8·3조치를 통해 기업에 특혜를 주었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다.”는 부정적인 내용이다.

⑤ 다음 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문은 공산주의자들의 단체인 정우회의 선언이고, 선언의 결과 만들어진 단체는 신간회이며, 예시된 답 가운데 정답은 “노동자·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이다.

위의 5개 문제 중 ②번과 ⑤번은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②번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해 주기 위한 한국사인식 관점인 식민사관에 관한 문제로서 신채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⑤번 문제는 공산주의자 단체인 정우회의 선언이므로 당연히 일제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진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는 ①번, ③번, ④번이다. ①번 문제는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③번 문제는 휴전협정에 관한 문제로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관심과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대한민국은 휴전협정에 반대하고 그 조인에 불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과 지식을 많이 갖는다)이며 따라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

이다. ④번 문제는 문제 자체로서는 운동권이나 비운동권 어느 쪽에도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나, 정답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대사 문제 5개 모두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8〉 2008년 하반기 지방9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개 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4개다.

①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위자(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문은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② 다음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문은 7·4남북공동성명 전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예시한 것이며, 정답은 통일 3대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담은 성명(7·4공동성명) 발표이다.

③ 다음에 제시된 사항들과 모두 관련된 인물은? 헤이그 특사,

서전서숙, 대한광복군정부, 권업회, 신한혁명단.

㉠이준, ㉡이상설, ㉢김원봉, ㉣이동휘.

④1991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은? ㉠남북간 군사훈련 참관, ㉡남북간 상호 불가침, ㉢남북간 문화 교류, ㉣남북간 경제 교류.

위의 4개 문제 중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는 ①번과 ③번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는 ②번과 ④번이다. ①번 문제는 친일행위자에 관한 것이며,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관심과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지는 문제로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보다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이다. ③번 문제는 이상설이 정답이지만, 예시된 답으로 김원봉과 이동휘 등 좌익 독립운동가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보다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이다. 김원봉과 이동휘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비운동권 응시자들에 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좌익인물이기 때문이다.

②번 문제는 7·4남북공동성명과 그 전후에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지식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④번 문제는 1991년에 서명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에 관한 문제로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현대사 문제 4개가 모두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9〉 2009년 7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4개다.

① 〈보기〉의 각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가)남북한 당국이 서울과 평양에서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나)서울에서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다)평양에서 남북한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라)백두산 관광, 서해평화지대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한 10·4정상선언을 발표하였다.

㉠(가)에서 통일의 과도 단계로 1국가 2체제의 유지를 합의하였다. ㉡(나)에서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에서 통일문제는 6자회담을 활성화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시범 운영을 합의하였다.

② 일제 강점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의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예문의 ()에 들어갈 운동은 3·1운동이다. 예시된 답은

①수양동우회사건, ②송죽회사건, ③조선학생과학연구회 발족, ④경성철도 노동자 및 총독부 인쇄공 파업.

④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 미국 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 세계 군대에 합류하여 크게 기여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우리의 공동이익임을 생각하며, 이에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 경제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①한·미연합군 사령부를 개편하였다. ②전쟁에 필요한 물자 일부를 한국에서 구매하였다. ③한·미간에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다. ④미국은 경제 개발을 위한 추가 AID차관을 공여하였다.

위의 4개 문제 중 ②번과 ③번은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이고, ①번과 ④번은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②번 문제는 운동권 응시자와 비운동권 응시자 중 어느 쪽에도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가

다. ③번 문제는 3·1운동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 파업이 정답인 문제로서, 노동자 파업이나 좌익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①번 문제는 남북간에 합의된 각종 성명과 합의서 및 그런 문서들이 도출된 회담들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 있어야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로서 남북문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④번 문제는 국군의 월남파병과 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조치 및 주한미군 활동에 관련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서, 반미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 관심과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진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현대사 문제 4개 중 3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2개 문제는 모두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10〉 2009년 9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개 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5개다.

① 195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50년에 시행된 농지개혁으로 토지가 없던 농민이 토지를 갖게 되었다. ⓑ1960년대에 임금은 낮았지만 낮은 물가 덕분에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 ⓒ197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노동 3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다음 중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남북 관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③ 다음 한말 · 일제하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6·25전쟁 이전 북한에서 일어난 다음의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북조선 5도 행정국 설치, ㄴ. 토지개혁 단행, ㄷ. 북조선 노동당 창당, ㄹ.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

⑤ 1919년 3·1운동 전후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의 5개 문제 중 ③번과 ⑤번은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들이고 ①

번, ②번, ④번 문제는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들이다. 일제시기 2개 문제는 운동권 응시자와 비운동권 응시자 중 어느 쪽에도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3개 문제 가운데 ①번 문제는 195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노동자 농민에 관한 상황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노동자·농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②번 문제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④번 문제는 북한 정치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현대사 문제 5개중 3개 문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 3개는 모두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11〉 2009년 상반기 지방9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개 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6개이다.

① 아래의 《조선사》와 《한국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설명문:《한국통사》는 간행 직후 중국·노령·미주의 한국인 동포들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비밀리에 대량 보급되어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 주고 독립 투쟁정신을 크게 고취하였다. 일제는 이에 매우 당황하여 1916년 조선반도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선사》 37책을 편찬하였다.>

㉠《조선사》 편찬자들은 조선의 역사를 정체성, 타율성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한국통사》의 저자는 우리의 민족정신을 ‘혼’으로 파악하였다. ㉢《조선사》 편찬의 목적은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었다. ㉣《한국통사》의 저자는 《조선사연구초》도 집필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였다.

② 4·19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1942년 중국 화북지방에서 결성된 조선독립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일제시기의 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⑥ 일제하에서 일어났던 농민·노동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의 6개 문제 중 ①번, ④번, ⑤번, ⑥번 4개 문제는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이고 ②번, ③번 2개 문제는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①번 문제는 일제하 한국사 서술의 민족사관과 식민사관의 대립에 관한 문제로서 사관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④번 문제는 일제시기 중국공산당 장악지역에서 결성된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투쟁 단체인 조선독립동맹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일제시기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⑤번 문제는 운동권 응시자나 비운동권 응시자 어느 쪽에도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⑥번 문제는 일제시기 농민·노동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②번 문제는 7·4성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문제로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③번 문제는 운동권 응시자나 비운동권 응시자 어느 쪽에도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현대사 6개 문제 가운데 4개 문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2개 문제 가운데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12〉 2009년 하반기 지방7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개 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4개다.

① 일제하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다음은 남북 간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내용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ㄱ.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ㄴ. 금강산관광 개시, ㄷ.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ㄹ.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향 방문단의 서울과 평양 각각 방문.

③ 8·15해방 이후 여러 정치세력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일제하 총독부 관리였던 와다 이치로는 《조선토지·지세제도 조사보고서》라는 책의 저술을 통해 조선의 토지제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의 4개 문제 가운데 ①번과 ④번은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이고, ②번과 ③번은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일제시기에 관한 ①번과 ④번 문제는 운동권 응시자와 비운동권 응시자 어느 쪽에도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 가운데 ②번 문제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③번 문제는 운동권 응시자와 비운동권 응시자 어느 쪽에도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현대사 문제 4개 가운데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2개 문제 가운데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13〉 2010년 9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개 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5개다.

① 일제 강점기의 문예활동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②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예문으로는 ㄱ. 민주정의당 창당선언문의 내용, ㄴ. 호헌철폐 국민대회 선언문의 내용, ㄷ. 3·1민주구국선언문의 내용, ㄹ. 전교조발기선언문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③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문은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의 제1조와 3조이다.

④ 현대 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70년대 이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서구 문화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노력이 펼쳐졌다. ㉡ 196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 문화 활동이 활발하였다. ㉢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줄어들고 언론의 자유는 확대되었다. ㉣ 1980년대 이후에 고등 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학이 많이 세워졌다.

⑤ 다음 내용을 발생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ㄴ. 6·15 남북 공동 선언, ㄷ.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ㄹ. 금강산 관광 개시, ㄴ.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위의 5개 문제 가운데 ①번 문제는 일제시기에 관한 것이고 ②번, ③번, ④번, ⑤번 문제는 해방 후 시기에 관한 것이다. ①번 문제는 운동권 응시자나 비운동권 응시자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은 문제이다. ②번 문제의 예문 중 3개는 모두 운동권의 선언문이고 나머지 하나인 민정당 창당 선언문도 운동권이나 관심을 가지는(비운동권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선언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

는 운동권의 활동 및 운동권의 적대세력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③번 문제는 친일과 청산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이 강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④번 문제는 운동권의 문화활동에 관한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⑤번 문제는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관한 것으로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이다.

현대사 5개 문제 가운데 4문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는 모두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14〉 2010년 지방 9급 임용시험 한국사 문제

총 20개 문제 중 현대사 문제는 4개이다.

① 4·19혁명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은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② 일제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데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초기 소작쟁의의 요구 사항은 주로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료 인하 등이었다. ㄴ. 일본인 농장·지주회사를 상대로 한 소작쟁의는 규모도 크고 격렬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ㄷ. 1920년대 농민들은 자위책으로 소작인조합 등의 농민단체를 결성하였다. ㄹ. 소작인조합은 1940년대 이후 자작농까지 포괄하는 농민조합으로 바뀌었다.〉

④ 1945년 12월에 개최된 모스크바3상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의 4개 문제 가운데 ②번과 ③번 문제는 일제시기에 관한 것이고 ①번과 ④번 문제는 해방 후 시기에 관한 것이다. ②번 문제는 운동권 응시자나 비운동권 응시자 어느 쪽에도 유리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③번 문제는 일제하 농민운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제하 농민·노동자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①번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그 정답이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이므로 반

민족행위자 처벌법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보다 많은 운동권 및 친 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다. ④번 문제는 어느 쪽에도 유리할 것이 없는 중립적 문제이다.

현대사 문제 4개 가운데 2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2개 문제 가운데 1개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인 셈이다.

Ⅲ. 종합

이상에서 서술한 총 14회의 시험지에 대한 개별적 분석들을 종합하여 총량적으로 재정리해 보면, 분석 대상 기간 중의 공무원 임용 시험의 현대사 관련 문제들 가운데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한 문제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석 대상 시험지에 출제된 현대사 문제에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시험지별로 정리하고 그 평균치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2007년 7급 임용시험: 67%(3문제 중 2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도 67%.
- (2) 2007년 9급 임용시험: 25%(4문제 중 1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는 50%.

- (3) 2008년 7급 임용시험: 20%(5문제 중 1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는 33%.
- (4) 2008년 9급 임용시험: 33%(3문제 중 1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는 50%.
- (5) 2008년 상반기 지방7급 임용시험: 33%(3문제 중 1개). 해방 후 시기 문제 없음.
- (6) 2008년 상반기 지방9급 임용시험: 75%(4문제 중 3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는 100%.
- (7) 2008년 하반기 지방7급 임용시험: 100%(5문제 중 5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도 100%.
- (8) 2008년 하반기 지방9급 임용시험: 100%(4문제 중 4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도 100%.
- (9) 2009년 7급 임용시험: 75%(4문제 중 3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는 100%.
- (10) 2009년 9급 임용시험: 60%(5문제 중 3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는 100%.
- (11) 2009년 상반기 지방9급 임용시험: 67%(6문제 중 4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는 50%.
- (12) 2009년 하반기 지방7급 임용시험: 25%(4문제 중 1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는 50%.
- (13) 2010년 9급 임용시험: 80%(5문제 중 4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는 100%.

(14) 2010년 지방9급 임용시험: 50%(4문제 중 2개). 해방 후 시기만으로도 50%.

- 평균치: 현대사 전체 57.9%. 해방 후 시기 73.1%.

분석 대상 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2007~2010년의 14회의 시험에서 출제된 현대사 문제 가운데서 운동권 및 친운동권에 유리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회 평균 57.9%이고,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73.1%가 된다.

한편, 14회의 시험지들에 출제된 현대사 문제들의 개별적 및 범주별 출제빈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2007년 7급 임용시험: △박정희 정권 설명, △남북한 공동성명(언론용, △해방직후의 사건들(반민족행위자처벌법 제정,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발표,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 (2) 2007년 9급 임용시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신탁통치 실시)관련 사항, △일제의 식민통치, △해방 이후 남북한의 정치상황, △항일 의병운동.
- (3) 2008년 7급 임용시험: △박정희 정권 설명,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 내용,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관련 사항,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사항.
- (4) 2008년 9급 임용시험: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사항,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전문 관련 사항, △남한의 농지개혁.

- (5) 2008년 상반기 지방7급 임용시험: △일제하 한국 근대역사학성립 관련 사항(한국사 사관 관련 사항), △일제하 독립운동 관련 사항, △정우회 선언서.
- (6) 2008년 상반기 지방9급 임용시험: △1920년대의 시대상황,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관련 사항, △신채호 관련 사항(한국사 사관 관련 사항), △1948년 남북연석회의의 관련 사항.
- (7) 2008년 하반기 지방7급 임용시험: △남북한 공동성명(7·4성명 내용), △식민사관 관련 사항(한국사 사관 관련 사항), △6·25전쟁 휴전협정 관련 사항, △해방 이후 남한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사항, △정우회 관련 사항.
- (8) 2008년 하반기 지방9급 임용시험: △친일행위자 관련 사항(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관련 사항), △남북한 공동성명(7·4성명 내용) 관련 사항, △이상설(이준, 김원봉, 이동휘) 관련 사항, △남북한 공동성명(기본합의서 내용) 관련 사항.
- (9) 2009년 7급 임용시험: △남북한 공동성명(7·4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의 내용) 관련 사항, △일제하 경제상황 설명, △3·1운동과 관련된 노동자 파업, △한국군의 월남파병 대가로 취해진 미국의 대한 경제지원.
- (10) 2009년 9급 임용시험: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상황(주로 부정적인 지식을 요구), △남북한 관계(노태우 정부 시기), △한말·일제하 역사적 사건들, △6·25전쟁 이전 북한에서 일어난 북한

정권 수립 관련 정치적 사건, △3·1운동 전후 국내외 정세,

- (11) 2009년 상반기 지방9급 임용시험: △한국사 사관 관련 사항, △4·19혁명 관련 사항, △남북한 공동성명(7·4성명) 관련 사항, △조선독립동맹 관련 사항, △일제시기 경제정책, △일제하 농민·노동자운동.
- (12) 2009년 하반기 지방7급 임용시험: △일제하 항일민족운동, △남북한 공동성명(관계) 관련 사항, △해방직후 정치세력 동향 관련 사항, △조선 토지제도사 관련 사항.
- (13) 2010년 9급 임용시험: △일제하 문예활동, △운동권 단체들의 선언문 내용,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관련 사항, △1960~80년대 문화상황, △남북한 공동성명(관계) 관련 사항.
- (14) 2010년 지방9급 임용시험: △4·19혁명과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관련 사항, △일제의 조선교육령 관련 사항, △일제하 농민운동, △모스크바 3상회의 관련 사항.

위에 열거한 14회의 공무원 임용시험에 출제된 현대사 문제들을 출제빈도수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 사항의 출제 회수 계산에는 답안의 선택지에 등장한 회수도 계산되었다. 그러한 계산으로 인해 모든 문제의 전체 출제회수는 4회 증가했다.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들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일제하의 좌익단체(정우회 2, 조선독립동맹 1) 및 좌익운동가(김원봉

1, 이동휘 1), 그리고 노동자·농민운동(3)이다. 출제회수는 총 8회이며, 일제시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총 출제회수 26회의 30.8%나 된다. 그 다음으로 출제빈도수가 높은 것은 일제하에서 대립이 노출된 한국사 사관에 관한 문제로서 출제회수는 4회이다. 이 2개의 범주의 문제들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이 관심과 지식을 보다 많이 가지는 문제들인데, 이 두 범주의 문제들의 출제회수는 12회로서 모든 문제의 총 출제회수 26회의 46.2%나 된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문제의 출제회수가 단 2회에 그치고, 대한민국 건국주도세력(이승만 등)의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의 출제가 전무한 점과 크게 대조된다. 나머지 문제들은 일제하 독립운동 일반과 일제의 정책 및 일제하의 상황 일반에 관한 것들이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들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남북한 공동성명 및 그들 성명 전후의 남북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도합 9회 출제되었으며, 이는 해방 후 시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의 총출제회수 59회의 15.3%이다.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은 건준-인공(2), 좌우합작위원회(2)와 남북연석회의(1) 등 해방공간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단체와 사건들에 관한 문제이다. 도합 5회 출제되었다. 세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문제는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에 관한 문제로서 4회 출제되었고, 네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3회 출

제되었다. 출제 빈도수 2회의 문제는 4·19혁명에 관한 문제, 박정희 정권에 관련된 문제, 해방 이후 남한의 경제정책, 북한정치사에 관한 문제 등이다. 출제빈도수 1회의 문제는 해방직후의 정치동향,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남한 농지개혁, 6·25전쟁 휴전협정, 국군월남파병과 그 대가로서 제공된 미국의 경제지원, 1960~80년대 문화운동, 현행 헌법 전문, 운동권단체들의 선언문 내용 등이다. 해방 후 시기에 관한 문제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 및 사건에 관한 문제는 단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정리해볼 때, 분석대상 공무원임용시험 현대사 부문에 있어서 출제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에 관한 문제들이거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것이 쉽게 확인된다.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가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무원임용시험의 현대사 출제경향이 사상적으로 강한 좌편향성을 나타냈음을 확인해준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려면 국가의 건립과정 및 건립주도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하고, 건국이래의 국가 존립·발전과정과 그것에 기여한 인물·단체와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험지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일제시기 활동에 대한 긍정적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대한민국 건국 주도세력의 일제시기 활동에 대해서는 무시하며,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세력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대한민국 건국과정과 건국주도세력에 대한 지식은 무시하며, 건국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 지식은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지식만을 많이 요구했다.

공무원 임용시험 현대사 문제의 이러한 출제경향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들의 상당 부분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애착심을 희박하게 가지도록 하고,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가지며,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중시하는 운동권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공무원들은 일단 임용된 후에는 현대사에 대한 학습 기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습득한 현대사 지식이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지속된다). 바꾸어 말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어떤 공무원 노동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봉창을 하지 않고 다른 의식을 거행했다

는 사실은 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제경향은 공무원이 되고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그들의 대다수는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의 의식마저도 대한민국의 건국·수호·발전 및 건국·수호·발전의 주도세력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험에 보다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출제경향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하며, 출제경향에 맞게 공부하다 보면 출제경향의 사상적 편향성이 자동적으로 시험 준비생의 뇌리에 침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현대사 문제들의 출제경향이 운동권 및 친운동권 응시자들에게 유리하고 사상적 좌편향성을 가졌다는 사실은 분석대상 시험지의 현대사 문제 출제를 담당한 출제위원들의 명단과 그들의 사상경향을 파악하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그 출제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의 분석 및 개선방향



모준영(나라정책원 연구위원)

■ 국회정책토론회 발제문 2 (2011.2.18.)

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의 분석 및 개선방향

1. 문제제기

공무원은 국가에 고용되어 공적(公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헌법도 제7조 ①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법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 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국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그 충성이란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을 의미할 것이다. 그만큼 국가 공무원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가관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처럼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가관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에 각 과목의 시험문제는 지원자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국가관과 자질, 능력

을 지녔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사 시험은 지원자의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확인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구성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될 것이다. 적어도 지원자가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고 건국되었는지, 어떤 역경을 극복해 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분단된 상황을 자유민주적 체제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바로 알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분석은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 출제문제들이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 성장과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문제 출제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짧은 제안을 덧붙였다. 분석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급과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14회분에 출제된 근현대사 관련 문제들을 대상으로 했다.*

* 분석대상 14회분은 2007년 7급/9급, 2008년 7급/9급/상반기 지방7급/상반기 지방9급/하반기 지방7급/하반기 지방9급, 2009년 7급/9급/상반기 지방9급/하반기 지방7급, 2010년 9급/지방 9급 등임. 그리고 본 분석에서 근현대사의 범위는 개항(187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했음.

II. 출제문제 분석

지난 4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14회분(280개) 중에 포함된 근현대사 관련 문제는 총 82개로 회마다 평균 5개 이상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제된 문제들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남북관계(각종 선언 및 성명 포함)에 관한 문제가 9개로 가장 많았고, 좌파 및 중간파 단체의 활동, 동학 및 노동자/농민운동, 역사관(식민사관 비판 및 민족사관 옹호) 등이 5회 이상 다뤄졌으며, 모스크바 3상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북한역사, 친일청산, 4.19 혁명, 박정희 정권 등이 2회 이상 다뤄졌으며, 그 외에 브라운 각서, 헌법 전문, 각종 선언문 등이 출제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출제 문제들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1. 대한민국 건국과 성장, 발전 내용 외면

우선 분석 대상에서는 근현대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 건립과 경제발전, 자유민주주의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한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14회분 출제 문제 중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제시된 것은 해방 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다음 문제의 보기로 제시된 것이 유일했다. 그 외의 어떤 문제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다루지는 않았다.

문. 다음은 해방 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이다.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07년 7급]

- ㄱ.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 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 ㄷ.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발표
- ㄹ.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ㄷ-ㄴ-ㄹ-ㄱ ④ ㄷ-ㄴ-ㄱ-ㄹ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해 해방이후부터 건국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선각
자들에 대한 문제 역시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또 정부가 자유민주
주의 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 예컨대 이승만 정
부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전후 복구의 업적,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정책의 추진과 한일국교정상화 회담, 베트남 파병 등에 대
한 지식을 묻는 문제도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경제발
전과 관련해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제시한 문제는 다음의 예가 유
일했다.

문.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7
년 7급]

- ①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국가소유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진행되었다.
- ② 박정희 정권은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③ 한일협정의 체결과 베트남 전쟁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다.
- ④ 1970년대부터 철강, 조선 등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었다.

이 외에는 출제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문제들이 나왔다. 가령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다음의 문제를 통해 ‘독재정치’와 ‘장기집권’, ‘3.15 부정선거’ 등으로만 인식되도록 제시되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든 공과가 있는데, 출제문제는 과(過)만 부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 4.19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9급 지방]¹⁾

- ①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치와 장기 집권이 배경이 되었다.
- ②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었다.
- ③ 대학교수단의 시국선언은 4월 19일 학생시위를 촉발시켰다.
- ④ 학생이 앞장서고 시민이 참여한 민주혁명이었다.

1) 4.19를 문항으로 출제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의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 ‘유신 선포’, ‘미군 감축’, ‘유신헌법’ 등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문.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8년 7급]

- ①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대통령 선거는 모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② 10월 유신 선포 이후 여당인 민주공화당만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다.
- ③ 베트남 파병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강화되어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 중 주한미군 감축은 없었다.
- ④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냄으로써 전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었고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제 역시 출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분석 대상은 해방 이후의 경제정책과 경제생활에 관해 묻는 다음의 문제에서조차 농지개혁법으로 자본주의의 토대가 마련되고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제개발 성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

던 배경이나 지식을 묻기 보다는 농민의 부담이 증가되었다거나 대외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예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문. 해방 이후의 경제정책과 경제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8년 하반기 지방 7급]

- ① 1950년대에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농민층의 부담은 경감되고, 지주층을 불리해졌다.
- ② 1960년대에는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게 완화되었다.
- ③ 1970년대에는 ‘8.3조치’를 통해 기업에 특혜를 주었고,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다.
- ④ 1980년대에는 ‘3저 현상’에 따른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되었다.

대한민국 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문제 280문제 중에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에서 제시된 표현이 거의 없다는 것은 한국사 시험이 그만큼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겠지만, 특히 공무원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건국되었고, 공산주의 세력의 각종 도발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

제를 어떻게 지켜내며 발전시켜 왔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적 통일로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인식의 토대 위에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들에 대한 헌신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 발전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 출제는 응시자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향후 문제 출제에 있어서는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민족사관을 빌어 현재의 민중사관 강조

다음으로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민족사관을 강조했던 신채호와 박은식의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는 이 역사관의 중요성 때문보다는 민중을 역사 인식의 주체로 세우는 민중주의 역사관을 강조하며 민중운동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지금 각 학교 교과용의 역사를 보건대, 가치가 있는 역사는 거의 없다. 제1장을 펴보면 우리 민족이 중국 민족의 일부인 듯하며, 제2장을 펴보면 우리 민족이 선비족의 일부인 듯하며, 끝까지 전편을 다 읽어보면 때로는 말갈족의 일부인 듯하고, 때로는 몽고

족의 일부분인 듯하고, 때로는 여진족의 일부분인 듯하고, 때로는 일본족의 일부분인 듯하다. 오호라. 과연 이 같을진대 우리 수만 리의 토지가 이들 남만북적의 수라장이며, 우리 4천여 년의 산업이 이들 조량모초의 경매물이라 할지니, 어찌 그렇다고 할 것인가. 즉 고대의 불완전한 역사라도 이를 상세히 살피면, 동국주족 단군 후세의 발달한 실제 자취가 뚜렷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우리 선조들을 헐뜯음이 이에 이르렀는가. ... -독사신문-

문. 다음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나 민족의 흥망은 민족 정신인 국혼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 ②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1천년래 제1대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 ③ 세계사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체계화하였다.
- ④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등을 저술하였다

문. 아래의 『조선사』와 『한국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상반기 지방 9급]

『한국통사』는 간행 직후 중국·노령·미주의 한국인 동포들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비밀리에 대량 보급되어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 주고 독립 투쟁정신을 크게 고취하였다. 일제는 이에 매우 당황하여 1916년 조선반도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선사(朝鮮史)』 37책을 편찬하였다.

- ① 『조선사』 편찬자들은 조선의 역사를 정체성, 타율성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 ② 『한국통사』의 저지는 우리의 민족정신을 ‘혼’으로 파악하였다.
- ③ 『조선사』 편찬의 목적은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었다.
- ④ 『한국통사』의 저지는 『조선사연구초』도 집필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였다.

이는 민중주의 역사관에 기반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음에서도 드러나는데, 기존의 권력층에 도전하는 민중 층의 활동에 관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들만 해도 동학운동, 반정부운동, 농민·노동운동 등이 있다. 가령 분석대상 총80문항 중 동학 4개 문항, 농민·노동자 운동 5개 문항 등 9개 문항 이상이 출제되어, 약 11% 이상이 민중운동사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문. 일제하에 일어났던 농민·노동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상반기 지방 9급]

- ① 1920년대 소작쟁의는 주로 소작인 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② 1920년대 노동운동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쟁은 원산총파업이었다.
- ③ 1920년대 농민운동으로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 ④ 1920년대에 이르러 농민·노동자의 쟁의가 절정에 달하였다.

또 네루의 세계사편력 중 3.1운동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3.1운동 중 일어난 사건을 묻는 다음의 문제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응시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3.1운동 초기 단계부터 만세시위에 나섰고 파업 투쟁으로 운동의 분위기를 이어나갔다는 항쟁사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다른 예시 항목을 모르더라도 항쟁사를 학습한 지원자는 경성철도노동자 및 총독부 인쇄공 파업을 답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응시자는 다른 예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답을 맞출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문. ()의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 [09년 7급]

상패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아래 민족 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일본은 처음 얼마동안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곧이어 마각을 드러냈고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운동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적에 항거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조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곧장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 세계사 편력 -

- ① 수양동우회 해산 ② 송죽회 결성
 ③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발족 ④ 경성철도노동자 및 총독부 인
 쇄공 파업

심지어 항쟁운동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이기에 객관적인 역사 자료가 아님에도 그냥 인용해 출제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 문제의 보기 ㄱ은 동학의 <폐정개혁안 12개조>를 근거로 제시한 것인데, <폐정개혁안 12개조>는 역사 자료가 아니다. 1940년 발표된 오지영의 <역사소설 동학사>에 게재된 내용으로, 이 내용은 백산에서 붕기할 때 발표한 <사대명의>나 <전봉준 판결선고서> 등 객관적인 역사 자료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

에 <폐정개혁안 12개조>에 대해 사실 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논란 중인 부분을 문제로 제시하는 것은 동학운동을 근대적 이상 실현을 위한 혁명으로 주장해 오던 이들의 역사관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출제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문. 다음은 근대 변혁운동 과정에서 주장된 내용들이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07년 7급]

- ㄱ.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 ㄴ. 규장각 및 해상공국을 폐지할 것
- ㄷ.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 ㄹ.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하고, 다른 나라에 철도 부설 권을 허용하지 말 것

- ① ㄱ-ㄴ-ㄹ-ㄷ ② ㄴ-ㄱ-ㄷ-ㄹ ③ ㄷ-ㄴ-ㄱ-ㄹ ④ ㄹ-ㄷ-ㄴ-ㄱ

또한 다음의 문화 관련 문제는 반정부문화활동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지식을 묻고 있다. 사전에 이에 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이다.

문. 현대 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년 9급]

- ① 1970년대 이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서구 문화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노력이 펼쳐졌다.
- ② 196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 문화 활동이 활발하였다.
- ③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거치면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줄어들고 언론의 자유는 확대되었다.
- ④ 1980년대 이후에는 고등 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학이 많이 세워졌다.

또한 여러 차례 각종 매체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민주구국 선언문’, ‘호헌철폐 국민대회 선언문’, ‘전국교직원노조 발기 선언문’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겨 온 단체의 정신과 활동에 대한 지식을 요구되는 출제 문항도 있었다.²⁾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겨 온 이들이나 단체의 정신과 활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무원 선발 문제로써는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출제 문제들은 민중운동사나 항쟁사를 학습한 반체제적 인식의 응시자들에게 유리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 출제되면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자들은 민중운동사나 항쟁

2) [2010 9급] 출제문제. 아울러 같은 문제에서 ‘민주정의당 창당선언문’을 보기로 제시한 것 역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사를 학습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학습을 통해 체제에 저항적인 인식을 갖게 된 지원자들 중 일부가 공무원에 임용될 것이다. 출제 문제들을 통해 반체제적 공무원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 이상 민중운동 내지 항쟁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건국저지 활동을 통일운동으로 호도

건국과 관련된 인물들이나 단체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고 했던 좌파나 중간파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이는 기출문제들이 한반도 공산화를 목표로 했던 소련의 비협조로 통일정부 구성이 어려워졌다거나 그로 인해 한국 문제가 유엔에 이관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또 유엔에 이관된 이후에도 소련과 소련의 지시에 복무했던 좌파 세력이 유엔 결의에 의해 진행되었던 통일 정부 수립을 방해함으로써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 다음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8년 상반기 지방 9급]

국내에서 8·15해방 직후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건국 작업에 들어갔다.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 ② 좌파와 우파 인사들로 조직되었으나, 좌파의 독세로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탈퇴하였다.
- ③ 국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 ④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조선건국동맹이 모태가 되었다.

문. 다음 자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8년 7급]

조선의 좌우합작은 민족 독립의 단계요, 남북통일의 관건인 점에 있어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곡절을 거듭해오던 바, 10월 4일 좌·우 대표가 회담한 결과 좌측의 5원칙과 우측의 8원칙을 절충하여 7원칙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작 원칙과 입법 기구에 대한 요망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여,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며,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는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를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여 실시하게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서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며,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기능과 구성 방법, 운영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 ① 좌측은 토지의 유조건 몰수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 ②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민족 운동 진

영이 주도하였다.

- ③ 좌·우측은 반민족 행위자 처리 문제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④ 좌·우측은 합작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마찬가지로 여러 정치세력의 동향에 대해 묻는 다음의 문제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세력보다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나 ‘좌우합작위원회’를 보다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문제 출제에 있어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정통성과 법통(法統)의 맥(脈)이 해방 정국에서의 좌우(左右)합작 시도인 건국동맹 → 건준(조선건국준비위원회) → 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친북좌파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문. 다음은 해방 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이다.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07년 7급]

- ㄱ.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 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 ㄷ.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발표
- ㄹ.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ㄷ-ㄴ-ㄹ-ㄱ ④ ㄷ-ㄴ-ㄱ-ㄹ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협상에 나섰던 중간과의 활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남북연석 회의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고 남북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시 스탈린이 북한에 대리인 김일성을 내세워 단독정권을 수립하고, 소비에트화를 가속화하고 있었다거나 북한이 남북연석회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스탈린헌법에 기초한 헌법을 통과시키며 남북협상파들을 기만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남북협상파들이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북한 및 좌파세력들에게 남북총선거 반대, 단독정부수립 반대의 명분에 힘을 실어 준 듯 보이지만, 실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가 많았다는 친북좌파적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는 문제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문.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은?
[08년 상반기 지방 9급]

- ㄱ. 김구, 김규식이 제안했으며, 김일성, 김두봉이 이에 응함으로써 성사되었다.
- ㄴ. 남북연석회에서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 ㄷ. 이승만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막판에 참

석했다.

ㄹ. 미국은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적극 지원했다.

ㅁ. 이 회의에서 미, 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이처럼 출제 문제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이나 좌파 및 중간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 데에는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며 저지에 나섰던 이들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들의 활동을 통일운동으로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는 적절치 못한 문제라고 판단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좌파단체 및 북한 역사에 대한 관심 유도

출제문제들은 사회주의/공산주의 단체의 활동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해방 이후까지 활동하던 사회주의/공산주의 단체나 인물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그에 대한 깊은 이

해와 지식 없이는 풀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령 다음의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이 결성했던 <정우회(正友會)선언>의 일부를 지문으로 제시하고 단체의 활동에 대해 묻고 있다.

문. 1926년 발표된 다음 선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8년 상반기 지방 7급]

민족주의적 세력의 대두로 인하여 전개되는 정치적 운동의 경향에 대하여는 그것이 필요적 과정의 한 형세인 이상 우리는 냉연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수 없다. (중략)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 ① 이 선언은 신간회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 ② 이 선언에 자극 받아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을 집필하였다.
- ③ 이 선언이 발표된 이후 실력양성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 ④ 이 선언은 비타협적 민족진영인 연정회의 지지를 받았다.

1926년 4월 14일 결성된 정우회는 1925년 화요회, 북풍회, 조선노동당, 무산자동맹회의 등 4개 사회주의 단체가 통합해 조직한 4단체합동위원회의 후신이다. 위에 제시된 〈정우회선언〉은 제3차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이들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과 일시적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발표한 것이다. 결국 정우회선언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에 토대를 둔 선언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들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공산주의자들의 좌우합작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반복적인 출제는 마치 일제강점기에 추진되었던 좌우합작 노력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나 우익세력들 때문에 실패했던 것으로 호도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다음의 [09년 상반기 지방 9급] 문제는 중국 화북지방에서 김두봉, 최창익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항일 공산주의세력들의 단체에 대해 묻고 있고, ‘보천보전투’를 비롯해 거의 김일성과 관련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또 [09년 하반기 지방 7급] 문제는 1930년대의 일제하 항일민족운동의 보기로 ‘동북항일연군’을 거론하고 있다. 〈조선독립동맹〉은 1946년 3월 30일 조선신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북한 공산당의 핵심이 되었고, 〈동북항일연군〉은 후에 북한에서 김일성의 항일활동의 왜곡, 과장에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 1942년 중국 화북지방에서 결성된 조선독립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9년 상반기 지방 9급]

- ① 조선의용군을 거느리고 중공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쟁에 참가하였다.
- ② 조국광복회를 결성하고 보천보전투를 수행하였다.
- ③ 중국 국민당군과 합세하여 중국 각 지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 ④ 시베리아지방으로 이동하여 소련군과 합세하여 정탐활동을 전개하였다.

문. 일제하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하반기 지방 7급]

- ① 1920년대 흥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었다.
- ② 1920년대 후반 폭력투쟁을 벌여서 민족의 독립의지를 국내외에 고취하였던 대표적 인물은 이봉창과 윤봉길이었다.
- ③ 1930년대 만주지역에서는 일부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군과 연합하여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 항일 유격활동을 하였다.
- ④ 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정부와 미국의 지원 하에 활동하였다.

심지어 다음의 예처럼 북한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되

었는데, 북한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이다. 즉,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1945. 10), 북조선 5도 행정국 설치(1945. 11), 토지개혁 단행(1946. 3), 북조선 노동당 창당(1946. 8) 등 몇 개월 간격으로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배열토록 요구한 것이다. 제한된 20개 문항에 대한민국 역사만을 묻기에도 부족할 한국사 시험에, 더욱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공무원 임용시험에 북한의 역사와 좌파단체들에 대한 지식까지 묻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문. 6.25 전쟁 이전 북한에서 일어난 다음의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09년 9급]

- ㄱ. 북조선 5도 행정국 설치
- ㄴ. 토지개혁 단행
- ㄷ. 북조선 노동당 창당
- ㄹ.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

-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 ③ ㄴ→ㄱ→ㄹ→ㄷ ④ ㄹ→ㄱ→ㄴ→ㄷ

문.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48년 김일성은 남로당과 연안파 인사들을 배제하고 북한 정부를 구성하였다.
- ② 1965년 한국군은 UN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 ③ 1969년 3선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간접선거를 통해 1971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④ 1972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수령 유일 지도 체제를 확립하였다.

5. 자유민주적 통일관 검증 불가능

총 9개 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 우선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상당수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통일 지향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우선 1972년 남북한 고위급정치회담에서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이 통일과 관련해 합의해 발표한 것으로, 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성명이기는 하다. 북한은 이 7.4공동선언의 기본원칙을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설정하고 우리와 다른 해석과 입장을 선전해 오고 있다. 이에 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해 단순히 3대 원칙만을 묻고 있는 다음의 문제로는 응시자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통일관을 갖

고 있는지를 변별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문.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② 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
- ③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
- ④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연방제 안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또한 문제로서는 1회 출제되었지만, 보기나 예시 문항으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역시 자유민주적 통일관을 측정해 내기에 부적절하다. 이 선언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연방연합제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형으로 우선 느슨한 통일을 이룬 다음, 남한 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 혼란을 야기해 남한 내부의 혁명을 이루거나 북한에 의한 남한 점령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선전매체 <반제민전>은 2005년 7월 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 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건에서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수립될 수 있고, 향후 민주노동당 집권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

어서야 고려연방공화국이 건설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문. 다음은 어느 성명 또는 선언의 내용인가? [07년 7급]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 ② 1973년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 ③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 ④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

또한 2009년 시험부터 문제의 보기로 등장하고 있는 10.4 남북 정상선언 역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문제로 출제되기에는 적절치 못한 주제이다. 가령 다음 문제의 예시문항으로 제시된 ‘서해 평화지대 창설’은 10.4 정상선언을 통해 스스로 영토를 포기할 뿐 아니라 서해상의 해상작전마저 어렵게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수도권을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권에 내주는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다행히 정부가 바뀌면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지만, 이 합의 때문에 우

리 영토를 놓고 남남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거나 지문이나 보기로 제시해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문. <보기>의 각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9년 7급 (봉)책형]

- (가) 남북한 당국이 서울과 평양에서 7·4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나) 서울에서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다)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15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라) 백두산 관광, 서해평화지대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한 10·4 정상선언을 발표하였다.

- ① (가)에서 통일의 과도 단계로 1국가 2체제의 유지를 합의하였다.
- ② (나)에서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 ③ (다)에서 통일 문제는 6자 회담을 활성화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④ (라)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시범 운영을 합의

하였다.

이 외에 출제된 남북관계 관련 문제와 그 문제의 보기들 상당수가 1998년 이후의 사건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해서는 전혀 다루이지 않고 있다. 이에 헌법(제4조)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과 관련된 합의서나 선언, 통일 노력 등을 묻는 문제가 보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Ⅲ. 개선방향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기출문제들 중 상당수(40/82문항, 48.8%)³⁾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관을 확인하기에 부적절한 것들이었다. 오히려 국가관을 왜곡할 수 있는 편향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이러한 편향된 문제 출제를 반복해서 학습한다면, 자신들도 모르게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기대하기는 어

3) 말미의 <참고: 최근 근현대사 출제 문제 현황>에 주제와 문제점이 요약 정리되어 있음.

려울 것이다.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른 부문에서 활동하는 이들 가운데도 상당수는 이때 학습한 한국사 지식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사회의 어느 부문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학습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건립과 성장, 발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친북적인 통일관을 보이며, 민중 중심의 투쟁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사람들 역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토대로 빈번하게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마련이다. 이에 현재의 편향된 한국사 시험 문제들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운용하면 향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많은 응시생들에게 편향된 역사 지식과 인식이 주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사 시험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시험은 학교 시험과 더불어 시험의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그대로 다른 조직의 한국사 시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사 시험을 확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문제의 편향성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한국사 시험 확대를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문제 출제 과정과 출제문제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출제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경이 필요

하다. 첫째, 현재 수십만 개의 문제가 저장되어 있는 문제은행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시험 문제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자유민주적 통일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문제은행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편향된 내용의 문제는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둘째, 출제위원을 새로이 선정해야 한다. 출제위원들의 변경 없이는 출제경향의 변경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엄격한 조건을 두어 국가관이 투철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출제위원들을 선정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향된 이념을 갖춘 학계인사들이 향후 문제 출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출제위원들에게는 본인이 출제한 문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요구하고, 이름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해, 출제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전에 두었던 재검토 요원 대신 전문 감수위원을 별도로 선정해 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부탁해 중요한 역사적 오류, 편향성 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출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감수위원들의 자격기준 역시 엄정하게 수립해야 한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애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출제 내용에 있어서의 개선방향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적합한 내용인지가 기본 골격이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해 철저한 감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체성을 흐드는 문제들이 채택되고, 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들을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가?, 둘째, 대한민국의 건국과 건국 이후의 역사과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지와 애착을 갖고 있는가? 셋째, 북한체제의 본질 및 문제점, 남북관계의 성격, 자유민주적 통일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넷째, 국가의 주요 기본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절차와 내용을 개선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한다면 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문제들이 국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긍정적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인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수행해 낼 것으로 본다.

<참고> 최근 근현대사 출제 문제 현황

시험	주 제	문 제 점
07년 7급	○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
	○ 6.15 남북공동선언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향과 다름
	○ 근대변혁운동	사료로서 부적합한 자료에 근거한 문제 - 오지영 <역사소설 동학사>(1904) - 폐정개혁안 12조 중 토지의 평균 분작 - 사회주의혁명 성격의 내용 그대로 반영
	○ 신채호 <독사신론>	식민사관 비판, 민족사관 강조 → 현재의 민족/민중사관에 정당성 부여
	○ 해방 후 사건 순서 배열	건준의 인공 선포, 좌우합작위 좌우합작 7원칙 등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좌익·중간파에 대한 지식 요구
07년 9급	○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
	○ 동학 <백산격문>	×
	○ 일제의 식민통치	×
	○ 대한국국제	×
	○ 해방이후 남·북한 정치	김일성의 북한정부 구성, 북한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공포 등 북한사에 관심 유도
○ 항일의병운동	×	
08년 7급	○ 박정희 정권	부정적 부분 부각될 수 있는 예시항목 제시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 - 베트남 파병, 주한미군 감축 등
	○ 개항기 사건 배열	×
	○ 좌우합작 7원칙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
	○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	×
	○ 모스크바 3상회의	×
○ 대한민국 임시정부	×	
08년 9급	○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
	○ 대한민국 헌법 전문	×
	○ 토지개혁	북한의 농지개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예시항목 제시
	○ 동학 <동경대전>	×
	○ 태극기	×
08년 상반기 지방7급	○ 한국근대역사학 성립	신채호 <조선상고사> 민족주의사학 강조 → 현재의 민족/민중사관 강조, 정당성 부여
	○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운동	건국동맹을 예시항목으로 제시
	○ 대한제국시기 국권회복운동	×
	○ <정우회> 선언서	사회주의단체에 대한 지식 요구
	○ 조영수호조약	×

08년 상반기 지방9급	5	○ 1920년대 시대적 상황	×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좌익단체 활동에 대한 지식 요구
		○ 갑신정변-동학봉기간사건	×
		○ 신채호 <조선상고사>서문	식민사관 비판, 민족사관 강조 → 현재의 민족/민중사관 강조, 정당성 부여
		○ 남북연석회의	대한민국 건국 반대
08년 하반기 지방7급	6	○ 7.4 남북공동성명	×
		○ 식민사관의 '타올성론'	식민사관 비판, 민족사관 강조 → 현재의 민족/민중사관 강조, 정당성 부여
		○ 6.25 휴전회담, 휴전협정	△ 휴전협정에 대한민국 서명하지 않은 부분 부각시키는 예시항목 제시
		○ 해방이후 경제정책/생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도 - 기업 특혜
		○ 최익현 상소문, 유길준 <서유건문>	×
		○ <정우회> 선언서	사회주의단체에 대한 지식 요구
08년 하반기 지방9급	6	○ 친일청산/친일파	△ 친일청산법조항에 대한 지식 요구
		○ 갑오개혁	×
		○ 7.4공동성명	×
		○ 근대 설립학교 순서 배열	×
		○ 인물: 이상설	△ 보기에 김원봉, 이동휘 등 제시
		○ 남북기본합의서	×
09년 7급	7	○ 남북관계	6.15, 10.4 선언 등에 대한 지식 요구
		○ 일제강점기 경제상황	×
		○ 기정진 <통상반대상소문>	×
		○ 순창군훈련총동	×
		○ 세계사편력: 3.1운동	'경성철도노동자 및 총독부 인쇄소 파업'을 정답으로 제시, 3.1운동 시기 노동자들의 투쟁운동 부각, 강조
		○ 조일2차통상장정: 방곡령	×
		○ 브라운각서	△ SOFA 체결 등 반미적 요소 내포
09년 9급	6	○ 1950년대 이후 한국사회	농민·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식 요구
		○ 노태우정부 시기 남북관계	△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시켰다는 등의 예시항목 제시
		○ 한말·일제하의 역사적사건	×
		○ 대한제국	×
		○ 6.25전쟁 이전 북한 내사건	북한역사에 대한 지식 요구
		○ 3.1운동 전후의 국내외정세	×
09년 상반기 지방9급	7	○ <한국통사> vs. <조선사>	식민사관 비판, 민족사관 강조 → 현재의 민족/민중사관 강조, 정당성 부여
		○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부분 부각
		○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지식으로 문제 풀이 가능

		○ 조선독립동맹	김일성 및 공산주의세력의 항일무장투쟁 지식 요구
		○ 삼국간섭	×
		○ 일제시기 경제정책	×
		○ 일제하 농민·노동운동	농민·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식 요구
9년 하반기 지방7급	5	○ 일제하 항일민족운동	보기에 동북항일연군 활동 제시 -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 동학 <농민군4대강령>	사료로서 부적합한 자료에 근거한 예시항목 제시 - 사회주의혁명 성격의 내용 그대로 반영
		○ 남북한 통일정책	×
		○ 해방이후 정치세력 동향	김준, 인공, 좌우합작 등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 한 인물들의 활동 제시
		○ 일제하 토지국유화 논리	×
10년 9급	8	○ 갑신정변 14개조항	×
		○ 일제강점기 문예활동	×
		○ 선언문 순서 배열	민정당창당발기문, 민주구국선언문, 전교조 결 성선언문 등
		○ 개항이후 외국과의 조약	×
		○ 간도역사	×
		○ 친일청산	△ 친일청산법조항에 대한 지식 요구
		○ 현대 문화의 성장과 발전	반정부/민중 문화 활동에 대한 지식 요구
○ 남북관계	남북기분합의서를 제외하고는 6.15, 10.4 등 과 관련된 내용		
10년 지방9급	5	○ 4.19혁명	△ 보다 본질적인 부분(경제 발전 요구) 배제
		○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	×
		○ 일제강점기 농민운동	농민운동에 대한 지식 요구
		○ 모스크바 3상회의	×
		○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

토론



이주영, 제성호, 배진영

■ 토론 녹취록

공무원시험 국사문제 좌익편향

■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공무원은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하고, 애국심과 충성심이 투철해야 하며, 책임의식, 전문성,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올바른 국가관이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분단국이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상대가 있다. 그와 같은 대북관, 통일관을 포괄한 것이 국가관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증진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이익이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이 아닌 민족의 이익과 같은 관념이나 주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행동이나 노선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의심하

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가질 태도가 아니다.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신념을 유지, 수호하려고 하고, 자유민주체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의 안보위협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다. 궁극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이 국가이익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나 정치현실, 북한의 대남 압박이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자들도 출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적 이익도 있겠지만 좀 더 거시적인 전략으로 좌파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 사회에도 좌파를 침투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을 통해 7급, 9급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사무관, 서기관까지도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 사무관, 서기관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뼈딱한 사상을 가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공무원 사회에 이들을 진출시켜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출제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강만길 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애기한 것을 들어 보니까 그 사람의 역사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60년 역사를 보면서 한 정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첫째, 어느 정권이 민주화에

더 기여했느냐, 둘째,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로서 자주성을 더 확립했느냐, 자주를 더 확립했느냐, 셋째, 통일에 얼마나 더 기여하고 한 발 더 나아갔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다. 결국 강 위원장은 민주, 자주, 통일, 즉 자민통을 얘기하고 있었다. 강 위원장은 순수하게 얘기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북한의 대남전략에 영합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평가에 있어) 우리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다거나 좀 더 잘 살게 했다는 것, 근대화, 산업화로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했다는 것,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것이나 공산화의 위협에 잘 대처해 자유를 지킨 것과 같은 내용은 기준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젊은이, 대학생, 30대-40대들의 의식이 그런 내용들로 지배되고 있다. 이에 가난에서 탈피하고, 80달러도 되지 않는 나라가 잘 살게 된 것,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공산주의체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한다.

끝으로 교수들, 출제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문제 출제된 시기를 보면 2007년까지만 나온 것이 아니고 2008, 2009, 2010년까지 나왔다.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만약 출제위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출제과장, 공무원 과장, 담당

관들을 문제 삼아서, 문책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과장이라도 비판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은 검증하는 몇 차례 과정에서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출제과장이 그 문제를 빼도록 해야 한다. 걸려져서 수정이 되어야 한다.

출제위원으로 역사학자만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다. 현대사면 현대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역사 문제 출제에 정치학자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균형 잡힌 정치학자가 역사 문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야 하고, 출제위원이나 검정위원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논란이, 시비가 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없도록 출제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문제제기되는 것은 출제되면 안 된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출제위원도 공개하라고 해야 한다.

■ 이주영 교수(전 건국대 부총장)

일단 해야 할 일은 한국사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배운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식만 물어보면 된다. 할 수만 있다면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출제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유지한다면, 우선 문제은행식으로

된 것을 없애야 한다. 문제은행식으로 되다 보니까 익명성의 문제가 발생해, 출제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문제은행 다 없애고, 한 사람에게 문제를 내도록 하면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본다.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를 다 없애고, 해마다 새 출제위원에게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뉘어 있는데, 대한민국사(史)인 한국사 현대 편에 북한사가 들어와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참여한 경덕출판사에서 나온 《한국현대사 이해》, 기파랑에서 나온 《한국현대사》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대한민국사만 다루도록 했고, 북한사를 별도로 첨부하는 식으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교과서도 대한민국 역사와 북한 역사를 섞어찌개로 해 두었다.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참고로 알기만 하면 되지, 그런 내용을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출제위원 교체를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누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이다. 역사학계는 별도의 세계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돌아가고, 역사학계는 역사학계대로 돌아가고 있다. 조선의 서원과 비슷하다. 서원에서 탄 소리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민족, 민중 명분 앞에 꼼짝 못한다. 다른 얘기를 하면 조선시대의 사문난적처럼 당하게 되어 있다. 이들은 현대판 위정척사파

들이라고 본다.

출제위원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출제를 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출제위원을 공개하는 식으로 하는 수가 있다. 출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

사회과학, 즉 정치학, 경제학에서 현대사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데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 현재로서는 한국사 시험제도를 빼는 것이 가장 좋다. 문제은행을 없애고 한 사람이 출제토록 하는 방법이 있다.

교과서는 교과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제일 먼저 교과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는가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하도록 한 집필 지침(기준)이 있다. 교과서 집필에 있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들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 공통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전의 한국근현대사와 이번 교과서하고 보면 조금은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 참 좋다고 본다. 또 다른 대책으로 잘못된 내

용을 지적하고 규명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작지만 틀린 것이 많다. 이념으로 그쪽으로 끌고 가다보니까 왜곡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왜곡을 찾아서 사실을 규명하라고 파고드는 것이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검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학사(史)가 나왔는데, 동학의 근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왜곡이 있었다.

동학의 근대성을 강조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 현재 우리 역사학계가 민족주의, 민중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은 <내재적 발전론>이다. 개화파들이 우리도 근대화하기 위해 서양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근대적 요소가 우리 민족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대적 요소는 상류층이 아닌 풀뿌리 민중에게 있다는 것이다.

내재적 발전을 강조하고, 동학의 근대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나오게 된다. 동학에서 근대성을 볼 수 있는 것이 폐정개혁안인데, 이것은 어느 사료에도 나오지 않는다. 1940년 사회주의자인 오지영이라는 사람의 《역사소설 동학사》에만 나온다. 이를 인용하면서 날조가 있었던 것이다. 어느 사료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을 한 사람의 소설에 나온 것에 의거해 교과서의 줄기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쉽게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역사학계에서 독립운동세력만 인정하고, 건국세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사실 보면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 총리 등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건국세력과 독립운동세력은 다르다. 그런데 독립운동세력만 강조한다. 그것이 민족주의이고, 민중주의이다. 뜻하지 않게 독립운동가의 주축이었던 김구가 좌파의 화신 비슷하게 되어 버렸다.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 김구를 띄우고 있다.

그리고 독립운동세력을 강조하다보니까 이제 1919년 건국설이 나왔다. 그들은 1948년에는 그냥 정부만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역사학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조선은 1910년에 멸망하지 않았고, 1919년에 망했다는 것이다. 순종은 일본이 세운 왕이고 진짜 마지막 왕은 고종인데, 고종이 1919년에 죽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상해임시정부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919년에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김구가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고, 시험제도이고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이고 없애야 한다. 한국사가 선택과목이었는데 필수가 되어 버렸다. 현재로서는 일단 시험을 없애고, 필수를 선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 배진영 기자(월간조선)

발표자들께서는 5년 안팎의 문제들을 분석하셨는데, 국사 문제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보다 이전부터였음을 말씀드리겠다. 한 때 고시공부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이미 국사 문제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실제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국가고시에 문제가 없었다. 당시 고시 과목에는 국사 과목과 문화사라는 세계사 과목이 있었다. 대개 국사 과목의 교재로 많이 보았던 것이 변태섭 《한국사통론》, 이기백 《한국사신문》과 같은 책들이었다. 정통 실증주의의 입장에서 관점도 좋은 책들이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굳이 그런 책들까지 보지 않아도, 대입 수험서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88년 이후부터 이상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사시험에서 원산 제네스트(원산 총파업)가 언제 일어났느냐, 암태도 소작쟁의가 언제 일어났느냐,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혹은 그 때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가 누구였느냐, 공산당의 외곽단체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 문화사에서는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좌파 단체들, 그들의 혁명 강령들, 그리고 중국 혁명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다. 이런 내용은 정상적인 국사, 문화사 책에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은 강만길 교수의 책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에나 나왔다. 이때부터 이 책들이 국사공부의 고시 필독서가 되기 시작한다. 또 역사비평사에서 나온 《한국의 역사》란

책이 있었다. 역사비평사가 민주주의 역사관을 전파하는 보루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나온 책이 필독서가 된다.

다음으로 학원 강사들의 문제가 있다. 80년대 중후반부터는 과거와 달리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해야만 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고시학원 강사들이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학생운동하다가 뚜렷한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 혹은 고시 준비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고시학원 강사가 되었다.

이 고시학원 강사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한다. 일례로 강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공고나 상고 가라고 했다고 권장했다고 하면서, 머리 좋은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골치 아파서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과서도 문제고, 강사도 문제였다. 현대사만 문제가 아니었다. 고대사에서도 은근슬쩍 이상한 소리를 했다. 가령 단재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관을 가르치면서, 신라가 당군을 끌어들이는 것을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끌어들이는 것에 갖다 붙이는 식의 얘기를 했다. 이러한 역사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어떤 개별적인 문제를 맞추느냐 아니냐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다. 국사 스무 문제 중 한 두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하지만, 한 문제 틀리면 총점에서 3-4점이 깎인다. 그런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0.001점 차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사

한 두 문제가 공무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사관, 세상을 보는 눈이 잘못 박힌다는 것이 문제다. 민중사관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 엘리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의식을 심어 준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광우병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검정 지침 문제의 경우에도 그것을 만드는 것은 교육부 관료들, 역사학계 학자들이다. 검정 지침을 만들어도 문제를 걸러낼 수 없다. 새로 나온 교과서 역시 좌편향이라고 하는데,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검정지침대로 한 것이라고만 답변한다.

이군현 의원이 개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한다고 하던데, 개헌을 하지 않아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직에 나서려는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주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인물들을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소개

■ 발족취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에 의해 행해진 광범위한 비정상적인 국가정체성의 훼손행위 즉, ① 국가안보시스템무력화 책동 ② 좌편향시각의 과거사왜곡 실태 ③ 역사교과서 왜곡실태 ④ 전교조 등 좌편향교육실태 ⑤ 사회전반의 친북좌파세력 발호 실태 등을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진상규명하여, 국가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한 민간위원회입니다./2008.6.10. 창설

■ 주요사업

(1) 안보분야 : 안보수사기구, 인력 축소상 조사. 정당한 안보수사활동 방해행위 조사. 대북안보기관의 친북반국가활동 조사. 안보기관 침투 반국가적 인사 척결

(2) 교육분야 : 역사교과서의 친북편향기술 내용 조사. 통일교육교재, 군정훈교재 등 조사. 전교조의 친북반국가활동상 조사

(3) 과거사 : 정부산하 과거사위의 친북반국가활동 조사. 과거사위의 예산, 인사남용 실태 조사. 과거사위의 민주화운동가 보상금

지급실태 등

(4) 사회분야 : 한총련, 실천연대, 범민련 등 친북좌파단체의 반국가활동상 조사.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지원실태. KBS, MBC 등 언론사를 통한 친북반국가활동 전파실태. 기타 국가정체성 훼손행위 조사

(5) 위 활동과 관련한 사업 : 학술세미나, 진상규명발표회, 기자간담회 개최. 관련 자료 발간사업. 관계당국 시정조치 요구, 법적 대응(형사고발, 행정소송). 위원회의 국가기관 제도화방안(관련법 제정) 등 제 사업

■ 2011년도 임원

고문단 : 안응모(전 내무부장관), 이동복(전 국회의원), 정기승(전 대법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위원장 : 고영주(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

자문단 : 김길자(경인여대 명예총장), 김언환(전 안기부 수사단장), 김제식(변호사, 전 부산동부지청장), 박광작(전 성균관대 교수), 성시웅(변호사, 전 부천지청장),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주영(전 건국대 부총장), 이필우(전 서울경찰청장), 정순영(전 동명대 총장, 세종대 석좌교수), 정재량(전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한광덕(전 국방대학원장, 예비역 소장)

집행단 : 김광동(나라정책위원장), 권혁철(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류석춘(연세대 교수), 이동호(북한민주화포럼 간사), 이덕기(충호안보연합 연구소장), 이주천(원광대 교수), 이춘근(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실장), 유광호(한국전략연구소장), 조영기(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함귀용(변호사,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자유민주연구학회 소개

■ 창설취지

북한 및 국내 헌정질서 부정 및 파괴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전략을 연구, 전파하기 위함/ 2005.10.22 창설

■ 주요사업

- (1)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 수호, 발전 전략 및 대책연구
- (2) 북한 등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대항전략 연구
- (3) 국가안보위해 선동물 분석 및 대응론 개발
- (4) 문화침투 차단책 마련
- (5) 위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논문 발간, 간행물 발간

■ 2011년도 임원

고 문 : 김철수(전 서울대 법대 교수), 박광작(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안응모(전 내무부장관), 이동복(전 국회의원), 정기승(전 대법관)

자문위원장 : 고영주(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

자문위원 : 강경근(숭실대 교수), 김석우(전 통일원차관), 김정봉(한중대 석좌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김제식(변호사,

전 부산동부지청장), 류석춘(연세대 교수), 박승춘(전 국방정보본부장), 송중환(전 주미공사), 안영섭(중앙대 교수),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 유호열(고려대 교수, 코리아정책연구원장), 이병진(전 경찰청 보안국장), 이주영(전 건국대 부총장), 이필우(전 서울경찰청장), 이춘근(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실장), 정창인(전 육사교수), 조용연(에스원 상근감사), 함재봉(아산정책연구원장), 홍관희(고려대 교수)

명예회장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함귀용(변호사)

회 장 :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부 회 장 : 권혁철(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김철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 사 : 강석승(경기대 교수), 고성호(통일교육원 교수), 김재권(전 경찰대 교수),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손광주(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일환(국가보훈교육원장), 유광호(한국전략연구소장),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주천(원광대 교수), 이효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철(상지대 교수), 장원재(파주영어마을 사무총장), 조영기(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최봉수(단국대 교수)

감 사 : 이동호(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역사왜곡을 통한 대한민국 허물기 공작,
좌편향화 된 한국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펴낸이_ 고영주 · 유동열
펴낸곳_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 자유민주연구학회
진행 · 인쇄_ 북앤피플

인쇄_ 2011년 8월 13일
발행_ 2011년 8월 15일

전화_ 02)2277-0220 팩스_ 02)2277-0280
등록_ 제406-2011-000078호

값_ 10,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1980년 이후 한국사학계를 장악한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국현대사에 대한 왜곡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뿐 만 아니라 이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의 친북좌편향 왜곡은 친북좌파세력들의 이른바 '역사왜곡을 통한 대한민국 허물기 작업'의 일환이다. 제 나라 역사가 일부 세력들에 의해 친북좌편향으로 왜곡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